

www.kwla.or.kr

형사공탁특례 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

2023. 12. 5.(화) 16:00

대한변호사협회 지하1층 세미나실 1·2

주최

대한변호사협회 |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사단
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PROGRAM

형사공탁특례 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

1. 일시 : 2023. 12. 5.(화) 16:00~18:00
2. 장소 : 대한변호사협회 지하1층 세미나실 1·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3. 주최 : 대한변호사협회·(사)한국여성변호사회

○ 사회 : 정수경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피해자국선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시 간	내 용
15:50~16:00	○ 등록
16:00~16:10	○ 개회식 환영사 김영훈 협회장(대한변호사협회) 축 사 김학자 회장(한국여성변호사회) 박영재 차장(법원행정처)
○ 좌 장 : 백종건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장)	
16:10~16:50	○ 발제1: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1주년, 무엇이 문제인가? -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16:50~17:30	○ 지정 토론 - 토론자 : 윤성현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토론자 : 박찬영 검사(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토론자 : 류경은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노선이 활동가(한국성폭력상담소) - 토론자 : 임효진 변호사(법무법인 YK)
17:30~18:00	○ 종합 토론 및 폐회



CONTENTS

형사공탁특례 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

발제

1.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1주년, 무엇이 문제인가? 15
신진희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지정토론

- 윤성현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45
박찬영 검사(대검찰청 검찰연구관) 52
류경은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7
노선이 활동가(한국성폭력상담소) 67
임효진 변호사(법무법인 YK) 73

부록

- 공탁법(법률)
공탁규칙(대법원규칙)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원-형사공탁 서식
검찰-형사공탁 서식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영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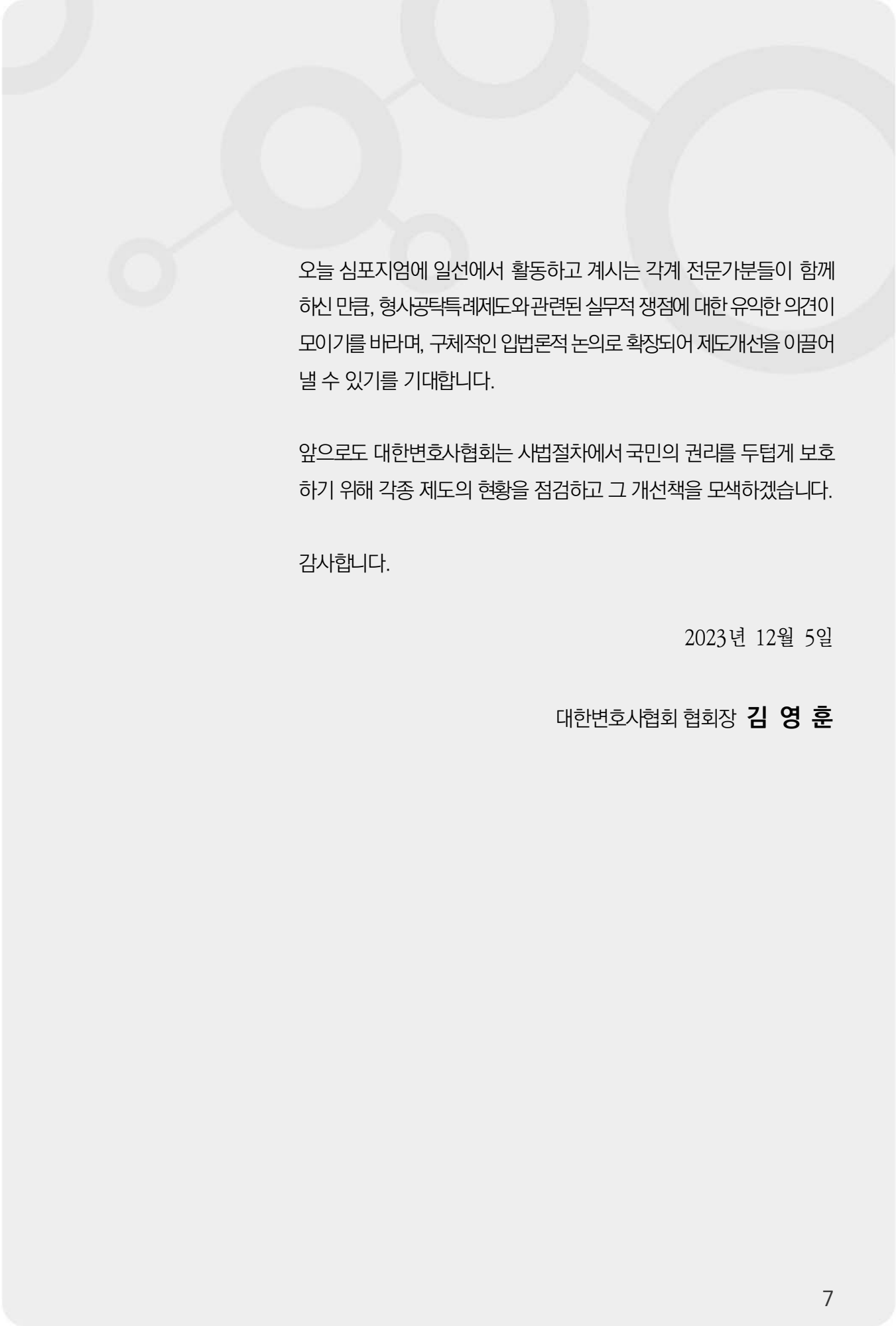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며, 이번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김학자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심포지엄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사건번호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았습니다.

형사공탁특례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하여, 양형에서의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거나 합의를 종용함으로써 발생하던 2차 가해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형사공탁특례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양형 감경사유로 고려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언론 등에서 형사공탁이 악용되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며 양형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우려가 표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형사공탁특례에 따른 양형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포지엄에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각계 전문가분들이 함께 하신 만큼, 형사공탁특례제도와 관련된 실무적 쟁점에 대한 유익한 의견이 모이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입법론적 논의로 확장되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각종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학자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학자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변호사협회와 김영훈 협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형사공탁특례 제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직접 참석하여 주신 법원행정처 박영재 차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12. 9.부터 시행된 형사공탁의 특례제도에 따라 형사피고인은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 의하면 살인,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횡령, 배임죄, 사기죄, 절도죄의 감경 및 집행유예 기준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있는데, 그 중 재산범죄가 아닌 살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처럼 범죄 이후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이 심각할 수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탁을 양형요소로 고려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도입되기 전에 형사공탁특례 제도가 시행되어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양형이 달라지는 문제점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공탁특례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거나 합의를 종용함으로써 발생하던 2차 가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제도 시행 후 6개월 만에 형사공탁이 60%가 증가한 점에 비추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 1주년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오늘
심포지엄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 할 것입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백종건 변호사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신진희 변호사님,
토론을 맡아주신 윤성현 판사님, 박찬영 검사님, 류경은 교수님, 노선이
활동가님, 임호진 변호사님, 그리고 오늘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약 200여분의 피해자 국선변호사님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톡방이 있고, 형사공탁특례 제도를 경험하신 29분의 변호사님들께서
이번 심포지엄의 설문조사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늘어난 업무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 지원을 더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따뜻한 고민의
글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뜻을 모아 앞으로도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 학 자**



법원행정처
박영재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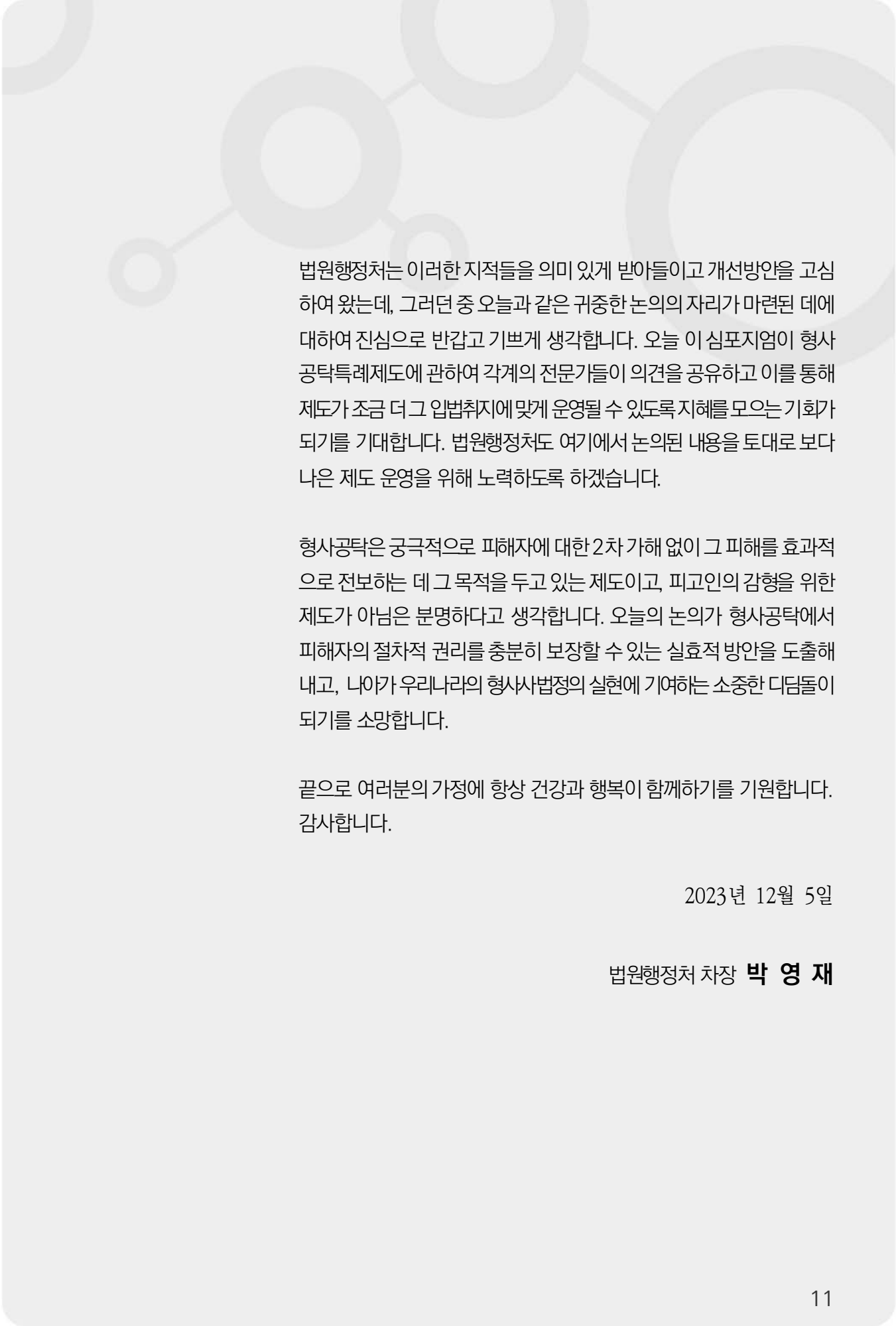
존경하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님,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형사공탁제도 개선을 위한 소중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신 대한
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심포지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합의를 종용하거나 공탁을 위한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 외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꾸준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2022. 12. 9.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규정한 개정 공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형사공탁특례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점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공탁건수와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형사
공탁특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더러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형사공탁을 어느 정도까지 감형 요소로 반영할
것인지, 변론종결 후 이른바 ‘기습공탁’이 있는 경우 이를 재판절차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위하여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데 드는 노력을 어떻게 경감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적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지적들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개선방안을 고심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오늘과 같은 귀중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된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이 형사공탁특례제도에 관하여 각계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제도가 조금 더 그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원행정처도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공탁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없이 그 피해를 효과적으로 전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이고, 피고인의 감형을 위한 제도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형사공탁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도출해 내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법원행정처 차장 **박 영 재**

[형사공탁특례 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

발제

발제 1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1주년, 무엇이 문제인가? 15

신진희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무엇이 문제인가

－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1주년 －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신진희

목 차

1. 개정 취지
2. 형사공탁을 대하는 피해자들의 태도
3. 피해자국선변호사가 본 형사공탁특례제도
4. 형사공탁특례제도의 운영 실태
5. 형사공탁특례제도의 문제점
6. 형사공탁특례제도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 가. 공탁 규칙의 개정
 - 나. 기습공탁 해결방안
 - 다. 먹튀공탁방지
 - 라. 피해자의 의사 반영
 - 마. 범죄별 양형기준의 세분화
7. 결 론

1. 공탁법 개정과 그 취지

가. 2020. 12. 8. 공탁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2022년 12월 9일로 이 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 제 5조의 2에 형사공탁의 특례제도를 두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 형사 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살인, 성범죄 강도 사기 절도 등에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을 감경요소(일반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는 상당한 피해회복(공탁포함)이 집행유예 일반 참작사유이다.

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이 형을 줄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시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고 싶어도 피해자의 신상정보제공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공탁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라. 또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 합의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손해배상금의 수령을 원하면서도 경우 자신의 신상이 피고인 측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는 이전의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도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늦춘다는 비판도 있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려고 한 다거나,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합의를 계속 종용하는 등 2차 가해의 문제가 발생하여 왔고 형사공탁특례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겨났다.

바.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이것이 피고인의 양형에서의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2. 형사공탁을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

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제도의 이용 가능성은 없다.

재산범죄에서는 피해액이 명확하고, 대부분의 재산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손실 회복을 형사재판 절차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합의 시도를 환영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공탁특례제도 이용은 문제 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전히 처벌은 원하고 있으나, 공탁을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을 받는데 동의하는 경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특히 문제되는 범죄는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살인죄나 위험운전치사상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금 등이 합의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부 손해배상액의 지급으로서 의미가 있고 피해자가 이것을 수용한다면 문제가 없다. 형사공탁특례제도에 의한 공탁금 수령 비율을 살펴보면 2022. 12. 6.9%, 2023. 1. 18. 5% 같은 해 2월 46.4%, 같은 해 7월 54%, 9월 48%로 절반 정도가 공탁금을 수령하고 있다.¹⁾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공탁에 대하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1)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공탁 사실에 대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공탁을 피고인의 양형에서 감형요소로 삼지 말아달라 의사표시를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된다.

2) 검찰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이 감형 요인으로 반영되자 적극적으로 항소를 제기하거나 변론재개를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장애인인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공탁금을 낸 사건에서 검찰은 피해자 모친에게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 맞대응해 감형을 막은 사례가 있다. 법무부는 ‘변론종결 후 기습적인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이 피해자의 의사를 신속히 확인해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하거나, 공탁 경위, 금액,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양형의견을 적극개진하는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답했다.²⁾

3) 그러나 판결문을 받아본 피해자들은 자신이 엄벌 탄원을 계속하는 것을 법원이 무시하고 피고인의 공탁만을 피고인 양형에서의 감형 사유로 삼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원에

1) 중앙일보 2023. 10. 10. 기사 “연예인 출신 사장, 또 성추행 감형 꿈수 감형 루트된 형사공탁”

2) 중앙일보 2023.10.10.기사

대해 분노를 표하는 경우가 많다.

[2001. 11. 1. 법정 3302-439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197)]

형사사건의 가해자(공탁자)가 피해자(피공탁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러한 신고는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조건부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고, 형사공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공탁금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형사사건으로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공탁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수령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확정 여부는 불명)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 11. 1. [공탁선례 제2-14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1999. 2. 5. 법정 3302-45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193)]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 피해금액을 변제공탁한 후에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공탁자가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송달받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나 출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공탁자는 피공탁자에 공탁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통상 ‘배달증명서’를 첨부하고 있는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접수원부의 보존기간이 1년으로 관련서류가 폐기되어 배달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공탁공무원으로서는 피공탁자의 공탁통지서 수령사실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새로이 공탁통지를 하게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건 질의 사안의 경우 변제공탁에 대하여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수령을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불수락 진술서’에 공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증인사무소에서 확정일자 공증을 받아 해당공탁소에 우편으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일응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탁통지서가 피공탁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하는 배달증명서 등의 서류는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러나 그러한 서류의 필요성 여부나 **피공탁자의 ‘불수락 진술서’의 진정성 여부는 구체적 공탁사건을 처리하는 공탁공무원이 첨부서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일 것이다.**

(출처: 공탁자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후 피공탁자가 공탁물수령을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불수락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권자가 회수청구를 할 때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제정 1999. 2. 5. [공탁선례 제2-8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4) 형사공탁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은 아예 합의를 요청하거나(10%), 형사공탁을 수용하는 모습(24%), 피고인이 감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것에 대한 불안(86%), 법원과 피고인에 대한 분노(75%) 반응을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유지하는 것이 버겁고 무용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형사공탁을 피고인의 감형 사유로 반영한다는 것에 대하여 분노한다.³⁾

5) 1심에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하자 2심에 이르러 아예 피고인과 합의를 한 피해자도 존재한다.⁴⁾ 형사공탁특례제도는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 피해자로서의 권리의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고인을 용서하였는지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판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도외시키고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는 재판부의 독단적 행태에 피해자와 국민은 분노한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와 피해자가 수용한 피고인의 형사공탁이 있는 경우와 피해자가 거부하는 피고인의 형사공탁이 있는 경우의 양형을 동일하게 감형 요인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 좀 더 세밀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

3) 미성년 대상 성범죄 5년 새 10배 폭증...2건 중 1건은 ‘집유’[2023 국감], 이데일리, 2023년 10월 9일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25206635771280&mediaCodeNo=257&OutLnkChk=Y>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510

6)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으로 공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적절한 보호가가 없는 경우 공탁에 대한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이다. 또한 형사재판 과정 중 피해자가 법원이나 국선변호사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피해자는 공탁에 대한 의견조차 법원에 표현하기 어렵고 절차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성년자 피해자 사건에서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며 미성년자 피해자 본인은 혼자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공탁금을 출급해야 한다. 여기에서 미성년자의 공탁금 출급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범죄의 경우 공탁을 양형 사유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과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경우 피고인을 감형한 판결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었고,⁵⁾ 최근 들어 미성년자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합의인지 여부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한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사건에서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공탁을 양형 사유로 참작하기 위해서는 판결 선고 전에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의 공탁금 출급 의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아빠, 저 아저씨와 합의하지 마세요” 주간경향1272호, 2018년 4월 17일자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804091651461&pt=n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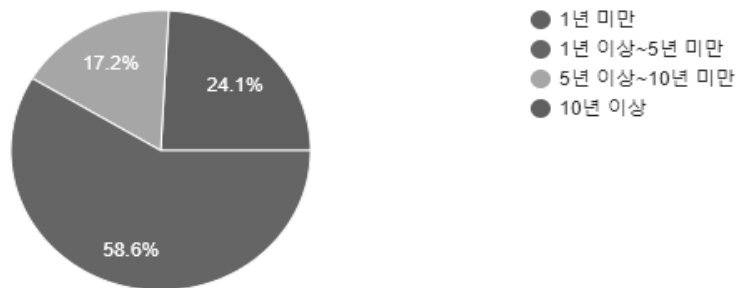
3.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경험한 형사공탁특례제도

2023. 10.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성폭력과 스토킹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사를 대상으로 형사공탁특례제도의 시행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총 2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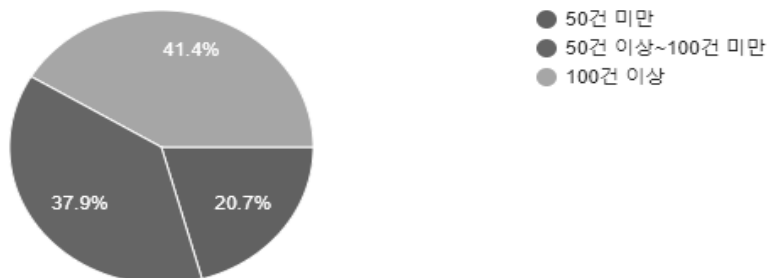
1-1. 귀하의 피해자국선변호사 업무의 연차는 어떻게 되십니까?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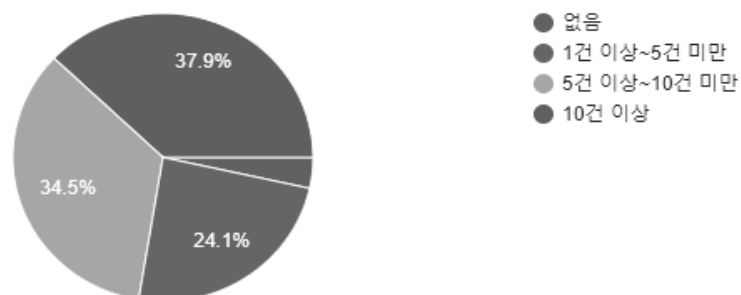
1-2. 1년 기준으로 대략적인 담당 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응답 29개



2. 2022. 12. 9.자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 후, 형사 공탁이 이루어진 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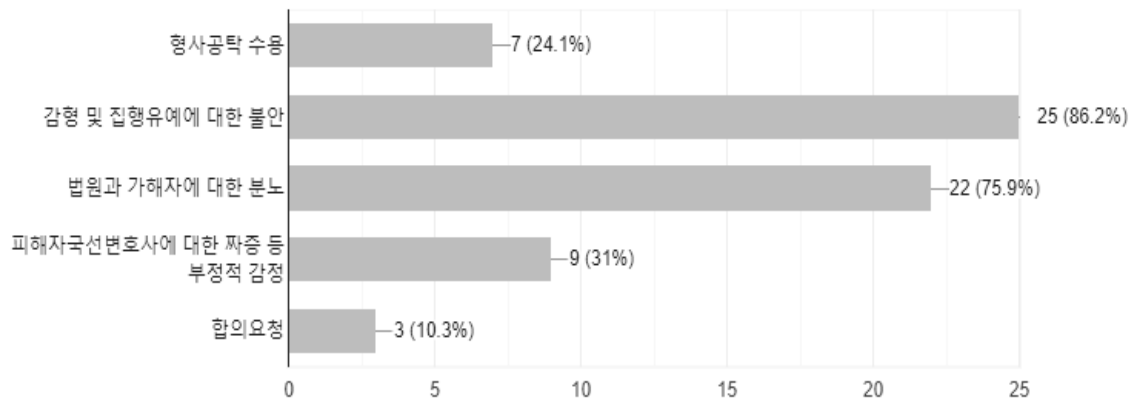
응답 29개



3. 형사공탁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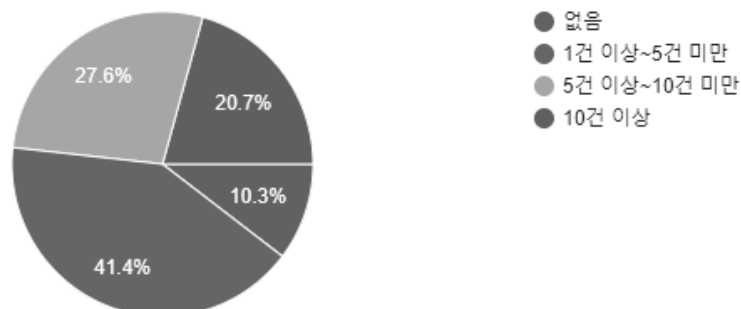
복사

응답 29개



4-1. 형사공탁 특례 제도에 따른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공탁사실통지서를 받은 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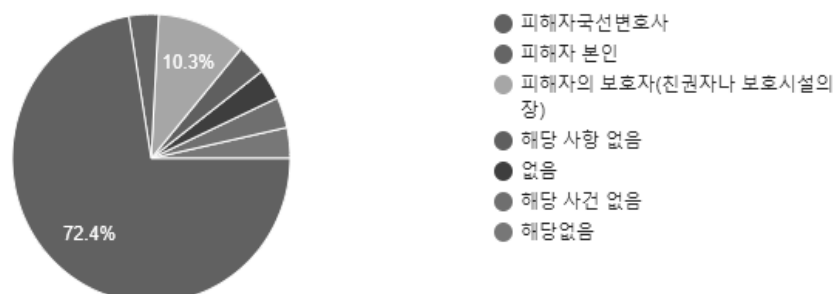
응답 29개



4-2.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공탁사실통지서는 어떻게 수령하셨습니까? (수령자가 '기타'인 경우 체크 후, 수령자를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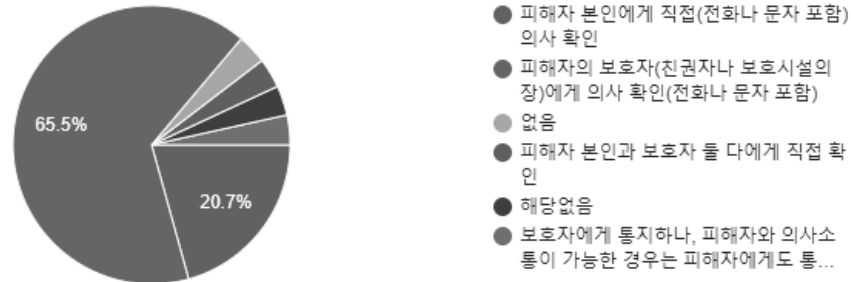
응답 29개



4-3. 귀하가 형사공탁사실에 대한 피해자(미성년자, 장애인)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기타'의 경우 체크 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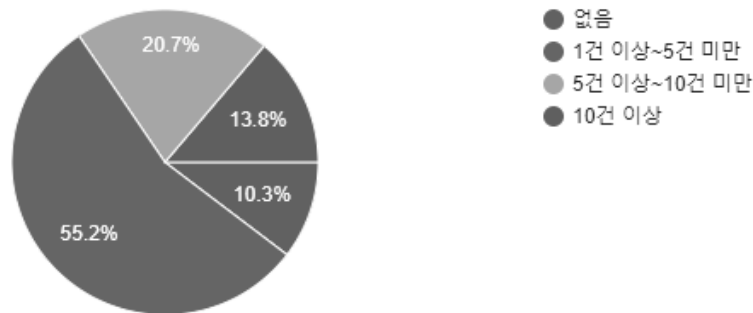
복
사

응답 29개



5. 피해자가 공탁 불수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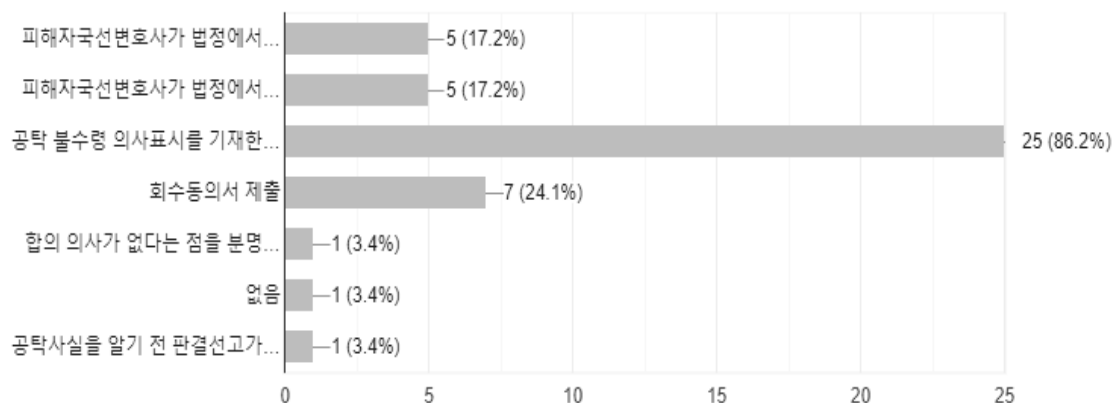
응답 29개



6. 피해자의 공탁 불수령 의사표시는 법원에 어떻게 전달하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기타'의 경우 체크 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복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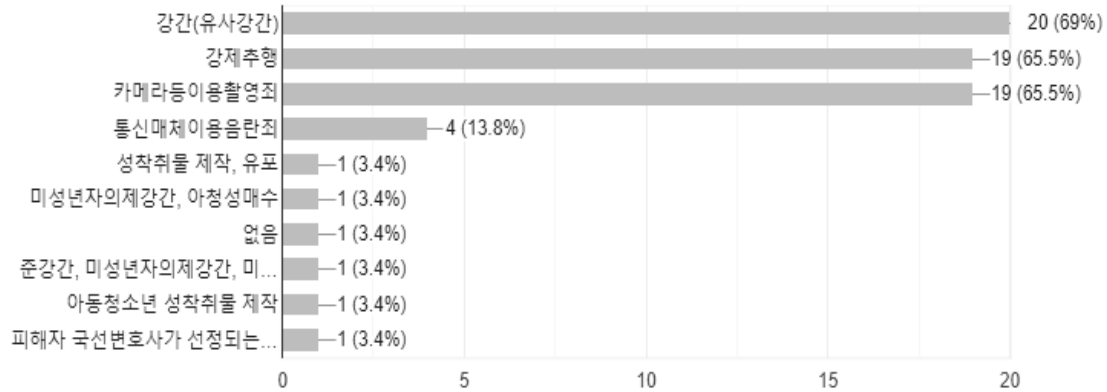
응답 29개



7. 형사공탁이 주로 이루어지는 죄명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기타'의 경우 체크 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복사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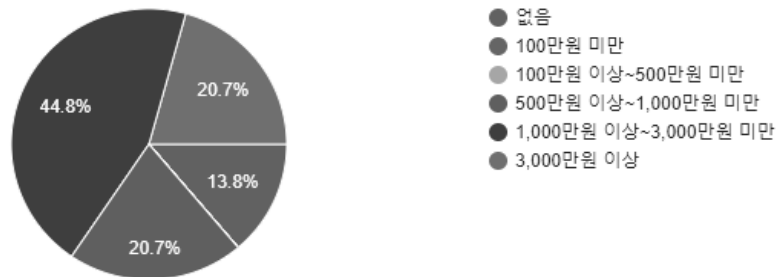


문항 8-1부터 8-5는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의 공탁금액에 대한 설문입니다.
(처리 사건 중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이 없는 경우 '없음' 표시하여 주십시오.)

8-1. 강간(유사강간)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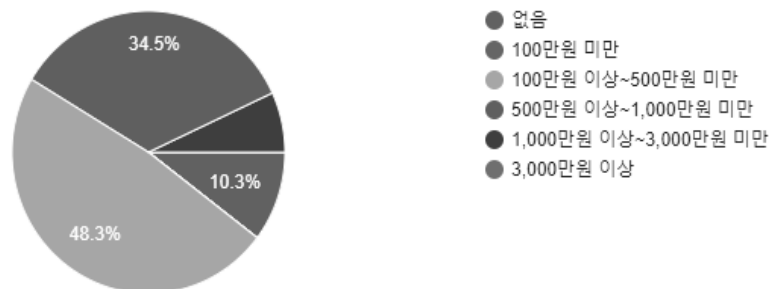
응답 29개



8-2. 강제추행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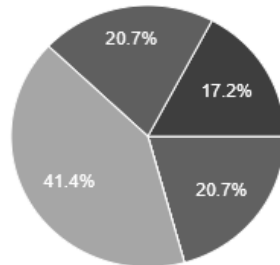
응답 29개



8-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복사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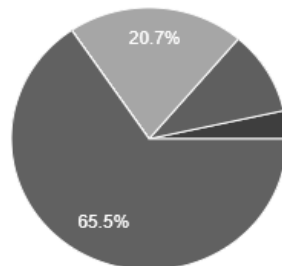


- 없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8-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복사

응답 29개



- 없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8-5. 기타 죄명과 공탁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선택형 주관식, 없는 경우 생략하고 문항 9-1로 이동합니다.)

응답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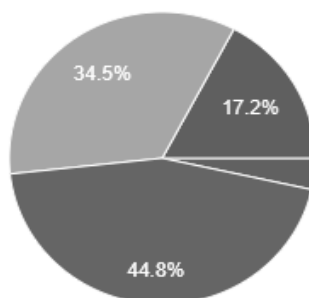
성착취물 제작, 소지 2~300개: 2천만 원(피해자 국선 사안은 아니나, 여가부 기금 통해 구조한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2천

아청 성착취물제작 2000

9-1. 판결문의 양형이유에 공탁이 기재된 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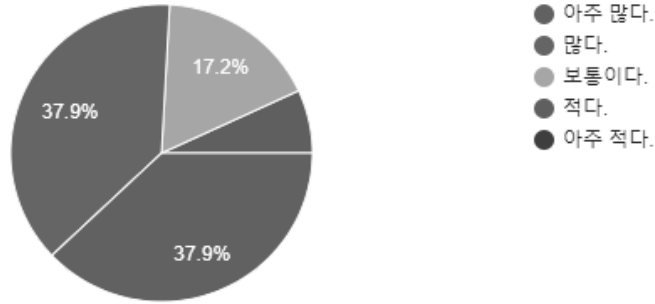
응답 29개



- 없음
- 1건 이상~5건 미만
- 5건 이상~10건 미만
- 10건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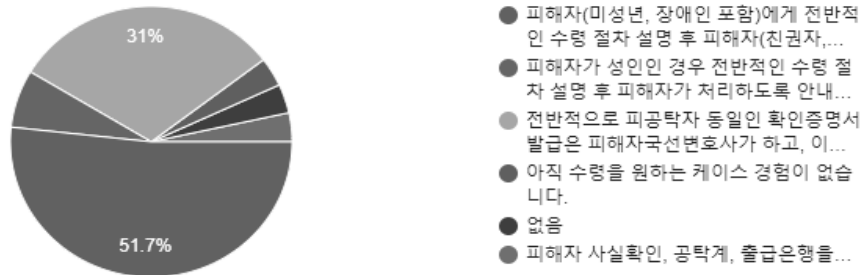
9-2. 형사공탁이 전체적으로 양형(피고인의 감형, 집행유예)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준다고 보시는지요?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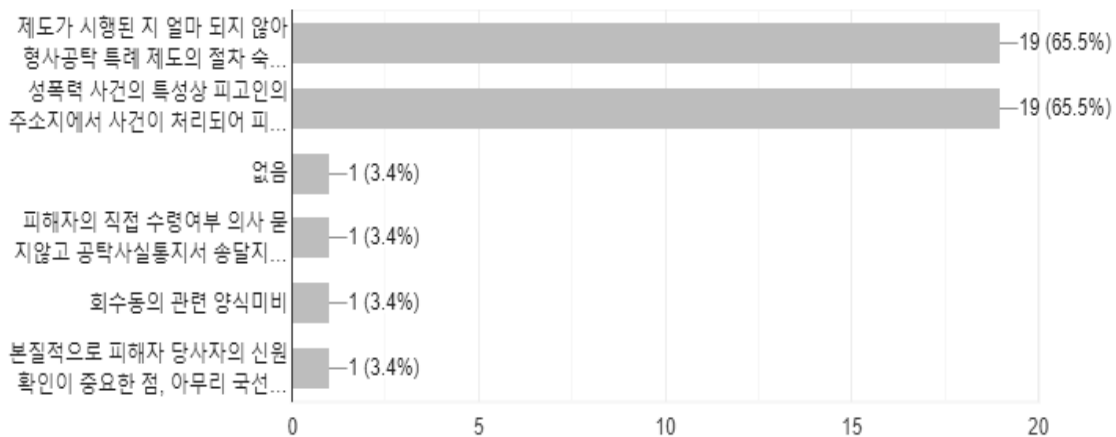
10-1. 피해자가 공탁물 수령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기타'의 경우 체크 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응답 29개



10-2. 공탁물을 수령하는데 있어 불편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기타'의 경우 체크 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응답 29개



11. 형사공탁 특례 제도에 대한 피해자국선변호사로서의 애로사항과 제도의 개선방향, 시행 후 느낀 점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피해자의 걱정, 분노가 매우 큼니다.
- 공탁 불수령 의사를 의견서로 밝혔음에도 피해회복으로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판결문에 기재된 경우 피해자의 분노와 고통이 심각합니다. 공탁제도로 피국의 업무가 늘었음에도 비용에 반영되지 않는 점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비해 관련 업무 보수 지급이 안 되는 점, 관련 업무에 생각보다 시간 소요 많 이 되는 점(민원이 많은 지역은 각 대기시간도 상당 소요)
- 적어도 성폭력의 경우에는 일방공탁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피해자가 공탁금의 수령을 원하지 않아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이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측이 선고 전날 공탁을 하는 등 회수동의를 할 시간을 주지 않음. 이때 법원에 선고 기일의 연기를 요청하고 피해자가 회수동의서 제출을 원한다고 의견을 개진해보아도 한 번도 받아 들여진 적이 없어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을 감형사유로 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음. 최 소한 피해자의 회수동의서 제출 권리는 보장할 시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람.
- 기습공탁이 많이 일어납니다.
- 피해자들의 합의하지 않을 권리, 엄벌을 탄원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가해자 중심의 제 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의 합의불원 의사가 공탁에 의해 무시당하는 현실이 불만스러움/합의금 찾지도 않았는데 공 탁사실만으로 감형하는 것은 부당함
- 일단, 피해자가 강력하게 합의를 원치 않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이 공탁을 해버리면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으로서도 피해자에게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아무리 공탁거부의사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해도 공탁이 감형요소로 작용되는 것을 막기가 힘든 재판부가 있어 피해자 변호사로서 무력감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차라리 피고인 측에서 미리 공탁을 하면 피해자 측에서 공탁회수동의서를 제출하여 조치를 취 하겠지만, 피고인이 일언반구 없다가 판결 선고 직전 기습공탁을 하여 피해자로서 아무런 조치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요새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오히려 형사공탁을 악용하는 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공탁에 대한 통지가 바로 바로 이뤄지지 않는 것 또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피해자 변 호사에게도 통지가 없고, 피해자에게 통지도 없이 선고가 되고 그 이후 알게 되는 경우는 여간 곤란 한 것이 아닙니다.
- 장애인 미성년자(특히 피해자와 보호자 의견이 다른 경우)의 의사확인의 어려움과 회수동의 절차 미 비/공탁에 대한 반영 기준이 없음

- 형사공탁 제도는 결국 공탁법상의 '특례'이므로, 피해자가 형사공탁을 거부하고, 이에 피고인이 납부한 형사 공탁금이 즉시 피고인에게 다시 공탁되어 형사공탁의 효력이 소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피고인 입장에서 연락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해 피해회복을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명시적으로 공탁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묵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형사공탁특례제도의 운영 실태

가. 공탁건수의 급증⁶⁾

1) 제도 시행 이후 형사특례공탁은 급증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6개월 만에 형사 공탁이 60%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2) 2022. 12. 9. 형사공탁제도 도입 후 2022. 12. 공탁 건수가 1,486건이었고, 2023. 5. 2,221건으로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같은 해 6월 2369건, 같은 해 9월 2011건, 같은 해 10월 2,398건으로 제도가 시행된 때로부터 상당한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3) 총 공탁 건수의 합계는 2023. 9.까지 1만8964건, 공탁금 총액은 1,151억8,782만 원 이고, 2022. 10.까지 총 공탁 건수는 21,362이다.

4) 피해자의 신상이 명확히 특정되어 공탁하는 변제공탁과 비교해 보면, 2023. 9.까지 형사 공탁 총수 1만8964건(공탁금 총액 1151억8782만 원)이고 같은 기간 변제공탁 건수는 2143건(공탁금 총액 430억7726만 원)으로 형사 공탁의 11.6%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하는 경우와 금액이 상당히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5) 공탁금 수령 비율을 살펴보면 2022. 12. 공탁 신청 1486건, 공탁금 지급건 102건, 공탁금 수령 비율 6.9%, 2023. 2. 공탁 신청 1217건, 공탁금 지급건 565건, 공탁금 수령 비율 46.4.%, 같은 해 7월 공탁 신청 1854건, 공탁금 지급건 1001건, 공탁금 수령 비율 54.0%이다. 2023. 9.기준 누적 공탁 건수 1만8964건 누적 공탁금 지급 건수 6,828건으로 총 36% 정도의 비율로 공탁금이 수령되고 있는 형편이다.

6) 중앙일보 23.10.10.자 기사, 대법원 정보공개청구

6)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신상이 명확하고 돈 문제로 공탁하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형사 공탁과는 그 수령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나. 법원의 태도

1) 감형을 인정한 판결(피해자의 의사 확인 관련 자료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다만 (중략)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중고 시절 왕따를 당한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과도한 집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중략)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⁷⁾라고 판시한 판결이 나왔다.

2) 피고인이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엄벌탄원의사를 표현한 경우(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공탁금회수동의서까지 제출한 경우 포함).

가) 양형조건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

- ① 서울고등법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사건에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씩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선고한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중략)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⁸⁾.”
- ②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략)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중략) A씨는 1심에서 정한 형량이 죄에 비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A씨가 피해자 가족을 위해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이 역시 감형 요소가 되진 못했다. (중략)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A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⁹⁾.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94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8) 서울고등법원 2023노25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9) 중앙일보 23.10.19. “내 전처랑 잤지? 의심해 지인살인 ...1억 공탁에도 징역 15년”

나) 감형 인자로 양형이유에 적시한 판결

- ① 그러나 대부분의 판결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의 탄원하고 있다”라는 사정과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각각 적시하고 있어 결국 공탁을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 감형사유로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② 서울고등법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중략) 피고인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중략)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¹⁰⁾”라고 판시하였다.
- ③ 서울남부지방법원 준강제추행사건에서 양형의 이유 중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중략)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라고 판시하였다.¹¹⁾
- ④ 서울고등법원 유사강간 사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중략) 한편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는바, 비록 제한적이나마 이러한 사정 역시 참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¹²⁾
- ⑤ 서울동부지방법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의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2023. 4. 21.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법원 00호로 금 1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중략) 피해자는 2023. 4. 24.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고,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중략)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¹³⁾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공탁 사실이 양형 이유에 적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10) 서울고등법원 2023노213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1248 준강제추행

12) 서울고등법원 2022노2593 유사강간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56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⑥ 그러나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렀고,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중략) 등 유리한 정상과¹⁴⁾”라고 판단하여 1심에서 피고인의 공탁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공탁에 영향을 받아 결국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⑦ 서울고등법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측의 2차가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일관되게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중략)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중략)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¹⁵⁾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탁금에 대하여 양형에 참작하지 말라달라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에 대한 판결문상 언급은 전혀 없다.
- ⑧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중략)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 공탁 한 점, (중략)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¹⁶⁾라고 판시하였다.
- ⑨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이반,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중략) A씨는 유족을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하고 지난달 14일 법원에 사실통지서를 제출했으나, 유족 측은 하루 뒤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이를 회수하라는 서류를 법원에 내고 이를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중략)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¹⁷⁾라고 판시하였다.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51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5) 서울고등법원 2023노217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1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17) 뉴시스 23. 10. 20. “배승아양 참변 대낮 만취운전 60대 징역 12년 선고”

다)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면서도 결정적 양형인자로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

피고인이 피해 회복 명목으로 당심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중략)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재산범죄가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 자유에서 유래하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나 합의금 수령 등을 거절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점을 결정적 양형인자로 취급하기는 어렵다.¹⁸⁾

5. 형사공탁특례제도의 문제점

가. 공탁금 수령 또는 공탁금회수동의서 제출 절차의 번거로움

1) 형사공탁특례제도는 변제공탁과는 달리 피해자의 신상정보 없이 법원의 사건번호로만 공탁이 이루어진다. 형사공탁절차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여 불수령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피해자가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인지를 피해자 스스로 증명하여야 하고 결국 피해자가 피공탁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2) 형사공탁특례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공탁금출급절차는 ① 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형사공탁통지를 받은 피해자국선번호사 또는 피해자가 ② 가명사건의 경우 검찰청, 실명사건의 경우 해당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피공탁자동일인확인증명서’를 발급신청하고, 수일 후 ‘피공탁자동일인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③ 공탁자(피고인)가 공탁한 해당 법원 공탁과를 방문하여 공탁금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1시간 정도 대기한 후 공탁금을 수령한다. 법률문외한인 피해자가 이러한 서류를 검찰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시간 소요도 상당하다.

3) 형사공탁특례규정 시행 초기인 만큼 이러한 공탁금 출급 관련하여 피해자국선번호사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실무상 문제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원 또는 검찰청이 피해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자국선변호사에게 형사공탁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형사공탁통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형사공탁절차에 대한 안내를 한다. 피해자가 만약 공탁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국선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검찰청(가명사건), 해당 법원 민원실(실명사건)을 직접 방문하여 ‘피공탁자동일인확인증명서’를 발급신청하고, 수일 후 검찰청 또는 해당 재판부의 연락을 받아 다시 검찰청 또는 해당 재판부를 직접 방문하여 ‘피공탁자동일인확인증명서’를 교부 받는다.¹⁹⁾

4) 관할법원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공탁금출금을 위한 이동거리가 상당한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의 관할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재판 중인 법원은 피해자의 주소지와 무관하다.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사건 초기 선정될 때는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서 관할 검찰청이므로 선정 검찰청과 기소검찰청을 달라지게 되고,²⁰⁾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 높아졌다. 피해자국선변호사는 타관이송 후 기소된 사건의 경우 검찰이나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피공탁자피공탁자동일인확인증명서’ 발급받지 못한다.²¹⁾

나. 피해자의 의사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거부의 의사를 의견진술이나 의견서를 제출 형식으로 표현하고, 또는 공탁금 수령 거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탄원서를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다.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의견진술이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공탁 거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진술서, 탄원서 등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판단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양형조건의 참작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19)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피공탁자동일인확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법원 민원실에서 접수받지만, 피공탁자동일인확인증명서는 직접 해당 재판부에 가서 교부받는다.

20)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불상의 범죄자들에 의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데, 피의자가 1명이 아닌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별로 관할 경찰, 검찰, 법원이 달라지게 된다. 이 경우 공탁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국선변호사는 각 피고인이 공탁한 해당 사건 법원, 해당 검찰을 직접 방문하여 피공탁자동일인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1) 피해자국선변호사가 검찰청에 ‘피공탁자동일인확인증명서’를 민원우편으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자국선변호사에게 피고인의 형사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는데, 이 경우 피해자국선변호사는 형사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기재한 ‘형사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 공탁과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해당 형사재판부에도 제출한다.

다. 먹튀공탁

살인죄의 피고인이 법원에 1억5,000만 원을 공탁하고 4년을 감형 받은 뒤 일주일도 안 되어 공탁금을 다시 찾아가는 이른바 ‘먹튀공탁’이 발생했다.²²⁾

라. 기습공탁

변론종결 전후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하는 공탁으로 피해자가 공탁 사실조차 알지 못해 재판부에 피고인의 공탁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의 공탁을 의미한다.

마. 이중 감형을 노리는 공탁

1심 때 공탁금을 내고 감형을 받은 뒤 2심에서 또 공탁금을 내 이중의 감형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

6. 형사공탁특례제도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가. 공탁 규칙의 개정안

현재 법원행정처는 형사공탁절차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필요 없이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을 통지받은 법원과 검찰이 직권으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것으로 해당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해자가 공탁금에 관한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공탁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22) 머니투데이 2023. 10.17.기사 “이탄희 먹튀공탁 통한 감형 막아야, 송경호 다각도 조치”

이러한 규칙 개정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형사공탁절차에서 겪었던 불편함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법원행정처에 지지와 감사를 보내고 신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이 전자 출급 등 좀 더 간이하게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나. 기습공탁의 해결방안

1)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하루 전, 이틀 전 시간이 촉박하게 공탁하여 이 공탁 사실을 피해자가 모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공탁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법원에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기습공탁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을 수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공탁이 판결문에 감형 사유가 되는 것을 알고 경악하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

2) 형사 공탁 사실을 신속히 피해자에게 알릴 것

이러한 기습공탁에 의한 피해자의 절차 소외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기습공탁을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탁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공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즉, 구체적으로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고, 법원은 이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화, 전자우편, 팩스,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고 공탁 수령 의사가 없을 경우 공탁회수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변론재개 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것

또한 변론종결 이후 공탁이 된 경우 필수적으로 법원에서 변론재개를 하고 판결 선고 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판 진행을 어찌할지는 논의해 볼 문제이다.

다. 먹튀공탁 방지-공탁금회수제한신고의무규정 마련 등

①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절차

[1992. 2. 19. 법정 제337호(공탁선례 제1-185호, 시행)]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의 종결시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을 붙였고, 그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공탁사실을 참작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공탁자는 피공탁자인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유족)가 공탁통지서를 수령받은 후 이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 받기를 통고하거나 민사사건에서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 되기까지는 다른 요건을 구비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출처: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제정 1992. 2. 19. [공탁선례 제1-18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②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절차

[1991. 5. 29. 법정 제926호(공탁선례 1-182)]

피공탁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중급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탁금회수제한의 뜻의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를 형사재판에 이용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으로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피공탁자가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보정하여 공탁통지의 재송달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피공탁자가 이에 따라 공탁통지를 받고서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제정 1991. 5. 29. [공탁선례 제2-6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③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

[1993. 2. 25. (공탁선례 제1-186호, 시행)]

형사사건의 가해자(공탁자)가 피해자(피공탁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러한 신고는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즉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므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공탁자는 공탁통지서가 피공탁자의 수취거절로 반송된 사실과는 관계없이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단지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 한하여 공탁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출처: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 제정 1993. 2. 25. [공탁선례 제1-18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정상자료로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의 유의사항」(재판예규 제7772호)과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행정예규 제118호)은 형사사건에서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형사공탁에서 제출되는 회수제한신고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않겠다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나, 이러한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내용 또한 임의적일 수밖에 없으므로(공탁선례 제2-144호),²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무자인 피고인 등이 변제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탁금회수제한신고의무규정을 마련하거나, 재판부에서 공탁을 양형사유로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는 내부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3) 사법보좌관 제도와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현안과 쟁점, 사법정책연구원, 2022.

라. 피해자의 의사 반영

1)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사건 중 86%는 형량이 깎였다는 분석도 있고,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전체 공탁 건의 75%가 감경사유로 명시되어 있다.²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엄벌 탄원을 계속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공탁 사실에 대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공탁을 피고인의 양형에서 감형 요소로 삼지 말아달라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공탁 사실을 피고인 감형의 요소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

2)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감형 사유로 삼은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도 없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이 피고인의 양형에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재판부에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 까지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있어 바로 피고인의 형을 감형한다는 식의 판결은 용납될 수 없다.

마. 범죄별 양형기준의 세분화

1) 현재의 양형기준²⁵⁾

가) 현재 우리나라의 양형 기준은 철저히 피고인의 입장에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만 피해자가 양형요소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하였는지(살인죄) 정도가 전부이다. 문제는 일반 재산범죄인 횡령배임 사기나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처럼 피해자의 범죄 이후의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이 심각할 수 있는 범죄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게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살인죄²⁶⁾

특별양형인자에 행위자 요소 중 감경 요소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양형인자의 행위자 요소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을 적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

24) mbc 2023.9.19. “돈내면 집유 형사공탁이 감형수단”

25) 2021. 7. 1. 양형기준 참조

26) 위 양형기준1쪽 이하

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처벌불원의사를 제외하고 피해자 유족의 피고인 처벌에 대한 의사를 반영하는 세심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성범죄²⁷⁾

강간죄, 강제추행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와 상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까지 모두 특별양형인자에 행위자 요소 중 감경 요소로 “처벌불원”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양형인자의 행위자 요소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을 적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의 상당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 측의 사실상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 불안 등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상황에서 의사 표시를 한 경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의 처벌 의사가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와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 포함된다.

상당 금액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횡령 배임범죄²⁸⁾, 사기죄²⁹⁾, 절도죄³⁰⁾,

특별양형인자에 행위자 요소 중 감경 요소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양형인자의 행위자 요소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을 적시하고 있다.

27) 위 양형기준 31쪽 이하

28) 위 양형기준 83쪽 이하

29) 위 양형기준 143쪽 이하

30) 위 양형기준 157쪽 이하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기준은 횡령죄, 사기죄는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는 미합의, “긍정적” 요소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일반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요소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이다.

집행유예 기준에서 절도죄는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는 피해 회복 없음, “긍정적” 요소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이다.

마) 디지털 성범죄³¹⁾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특별양형인자에 행위자 요소 중 감경 요소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반양형인자의 행위자 요소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을 적시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경우 특별양형인자에 행위자 요소 중 감경 요소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의 행위자 요소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을 적시하고 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특별양형인자에 행위자 요소 중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의 행위자 요소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을 적시하고 있다.

집행유예의 기준으로는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없음”을 들고 있다.

31) 위 양형기준 705쪽 이하

2) 개선방향

살인죄나 성범죄의 양형기준에서의 공탁은 기본적으로 양형 요소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다른 범죄에 비하여 더 적극적으로 고려 요소로 신설해야 한다. 특히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공탁)을 양형의 긍정적 요소로 삼는다면 피해자의 이에 대한 의사를 부정적 요소로 삼아야 함이 마땅하며 일반 재산범죄와 동일하게 적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재산범죄가 아닌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에서는 양형기준에 피해자 요소를 신설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세분화하여 양형에 영향을 주게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거나 처벌불원을 원하는지, 용서하지 않고 처벌도 원하나 피고인의 공탁금을 수령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엄벌 탄원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야 하고, 일률적 참작이 아닌 좀 더 세분화된 기준으로 참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결론

현대 근대형사사법제도는 피고인에 대한 고문 방지, 절차적 권리 확보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당시 피고인에 대한 무분별한 고문과 자백 강요로 왜곡되었던 형사사법제도를 바로 잡기 위한 나름의 절박한 제도의 성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2023년 지금의 피해자들은 과거의 피해자들과 다르다. 자신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원한다. 국민 여론 또한 범죄 피해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권리증대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요즘은 사적 보복을 주제로 한 각종 드라마 콘텐츠가 쏟아지는 것도 결국 피해자들이 법원, 검찰, 경찰을 신뢰하기보다는 범죄자들을 직접 처단하는 것이 낫다는 사법 불신에 근거한다.

이러한 국민 정서의 변화와 피해자들의 권리의식 고양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맞게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사를 적극 형사사법절차와 판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형사공탁특례제도의 개선은 그동안 피고인 중심의 사고방식과 형사사법절차를 피해자 중심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시대 전환기의 최대 이슈가 되었다. 앞으로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의 표현과 주장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이에 맞게 공탁 입법과 양형 기준 등 제도를 보완하여 나아가야겠다.

[형사공탁특례 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 **토론**

지정토론

윤성현 판사 45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정토론

박찬영 검사 52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지정토론

류경은 교수 57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노선이 활동가 67
한국성폭력상담소

지정토론

임효진 변호사 73
법무법인 YK



토론

지정 토론문

윤 성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 서론

2022. 12. 9.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이후 형사공탁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공탁수령을 용이하게 하며, 경미한 형사사건에서 거액의 합의금 요구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소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을 감면 받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보호를 취약하게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전에는 실무상 법원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했기 때문에, 공탁이 되었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었던 반면,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공탁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형사공탁은 다양한 범죄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왔고,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일반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공탁 포함’이 부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고, 때때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형사공탁이 가능해진 이상,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의 형사공탁을 감경인자로 고려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가 도외시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현행 양형기준에서 형사공탁이 어떠한 양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형사공탁 특례제도와 어느 지점에서 충돌하는지 살펴보고, 발표자께서 문제제기해주신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양형기준의 관점에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즈음에 동제도를 되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훌륭한 발표를 맡아주신 신진희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 현행 양형기준과 형사공탁

양형위원회에서는 2021년 12월경 각 범죄 별로 비통일적·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피해 회복(공탁 포함)’ 관련 양형인자를 전 범죄군에 걸쳐 통일적인 모습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양형인자		범죄
특별 감경 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살인, 강도,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장물, 권리행사방해(강요 포함), 손괴, 업무방해, 약취/유인/인신매매, 지식재산권범죄, 폭력범죄, 교통사고,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방화, 체포/감금/유기/학대, 근로기준법위반,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유가증권위조변조, 채권추심법위반, 명예훼손/모욕, 유사수신행위, 주거침입범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변호사법위반
일반 감경 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위증/증거인멸/증거은닉,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부정의료행위,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도주(범인은닉도피 불포함), 디지털 성범죄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살인, 성범죄 ¹⁾ , 강도,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장물, 권리행사방해(강요 포함), 손괴, 업무방해, 지식재산권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²⁾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방화, 체포/감금/유기/학대/아동학대, 근로기준법위반,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유가증권위조변조, 채권추심법위반, 명예훼손/모욕, 유사수신행위, 주거침입범죄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공탁은 감경인자 ‘실질적 피해 회복’ 또는 ‘상당한 피해 회복’ 문구 옆에 덧붙여 피해 회복의 수단 중 한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또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인자를 적용함에 있어, 단순히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 회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탁 자체가 독립적인 양형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 상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의 정의규정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1) 강간죄, 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를 모두 포함합니다.

2) 일반 교통사고(치상, 치사), 위험운전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를 포함합니다.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인자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②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공탁은 후단에서 정한 피해 회복의 수단이 될 수 있을 뿐 전단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사공탁 사실만으로 반드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인자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못 미치더라도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심리·판단한 결과 사회통념상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고려할 만한 수준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라야 감경인자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상당한 액수”를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인자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³⁾ 이러한 정의규정에 따르면, 현행 양형기준 아래에서도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이나 이른바 ‘먹튀공탁’, ‘기습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형사공탁 특례제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문제점

발표문에 수록된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시행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중 형사공탁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을 묻는 문항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중 86.2%가 ‘감형 및 집행유예에 대한 불안’을 응답하였고, 75.9%가 ‘법원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응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형사공탁을 양형에 감경요소로 반영하는 법원의 관행이나 현행 양형기준과 형사공탁 특례제도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시행에 따른 양형상의 문제점은,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에는 동의하였다는 전제 아래 형사공탁을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반영할 수 있었던 반면,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후로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에 동의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 공탁금 수령에 부동의하는 상황에서 양형에 있어

3) 다만, 양형기준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관한 정의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한 피해 회복의 기준을 다양한 범죄에 걸쳐 일관적으로 정하는 것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피해 회복의 상당성’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양형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해 회복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이 형사공탁 특례제도에 따라 기습적으로 공탁을 한다면, 피해자로서는 장래에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경인자의 요건을 충족한 셈이 되어 법원으로서도 이를 감경인자로 고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재산 범죄에서 문제될 소지가 적어 보이니(가령, 이른바 ‘중고나라 사기’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상당액을 공탁하였다면, 이를 감경인자로 적용할 수 있고, 이러한 적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재산 범죄, 가령 살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에서는 보다 문제가 될 여지가 큼니다.

4. 양형기준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가. 정의규정의 보완

재산 범죄의 경우 ① 손해액이 특정가능한 점, ② 타인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경미한 형사사건에서 거액의 합의금 요구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을 그 입법취지 중 하나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공탁이 문제될 소지가 크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의 경우에도 양형에 있어 감경요소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재산 범죄의 경우 손해액의 특정이 가능하지 않고, 피해자가 공탁금의 수령보다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 피고인의 공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인의 공탁을 양형에 있어 감경요소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비재산 범죄의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인자 정의규정에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기습공탁을 한 경우에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감경인자로 적용하기에 앞서 양형조사관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감경인자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 문구의 삭제

현행 양형기준은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의 정의규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범죄/비재산 범죄를 불문하고 양형인자 명칭에 ‘(공탁 포함)’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마치 피고인이 공탁을 하면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된다고 오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전에는 적어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해석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히 비재산 범죄의 경우 공탁과 피해 회복 사이에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형인자의 명칭에서 ‘(공탁 포함)’ 문구의 삭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개별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탁 여부’ 및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지 실질적으로 심리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 공탁 시기의 제한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여, 피해자는 공탁 사실을 모르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선 선고기일 직전에 피고인이 공탁을 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고기일을 연기하거나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이용한 공탁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함으로써 법원에서 피해자 의사 확인 등 충실한 양형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통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종국적으로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 비로소 공탁을 하는 실무관행을 고려하면, 공탁 시기를 변론종결 시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으로서 예상치 못한 시기에 변론이 종결될 경우 법원에 공탁을 이유로 변론종결을 늦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기제한이 피고인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5. 질의사항

가. 발표자께서는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선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 고려하는 실무관행에 대해서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① 피해자의 의사는 그 자체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의 정도와 관련이 없는 점, ② 책임과 예방 목적을 고려하는 양형이론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운 점, ③ 국가형벌권은 개인을 대신하여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점, ④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 고려하면 경제적, 사회적 지위나 사적 권력관계가 형벌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배심재판절차에 들어가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양형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면, 그 논리적 귀결로 공탁 역시 양형에 고려하지 않게 될 터인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구합니다.

나. 발표자께서는 발표문 26면에서 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② 용서하지 않고 처벌도 원하나 공탁금을 수령하여 실질적이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③ 피해자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벌탄원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좀 더 세분화된 기준으로 양형사유를 참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와 같이 양형사유를 세분화한다면 공탁금의 액수에 따라서도 세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가령, 실질적/상당한/미미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양형사유를 세분화할 경우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분화된 양형사유를 현행 양형기준에 반영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6. 결론

현행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을 하거나 기습공탁을 하였을 때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 재량권을 행사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심리하고 피고인의 공탁을 감경요소를 반영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양형기준상 공탁 관련 양형인자가 재산 범죄/비재산 범죄 구분 없이 정의되어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에 대한 명시적인 지침이 없어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으로 감형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시키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형사공탁제도가 과도기에 있는 상황에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부작용 없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가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개선에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기습공탁 등 형사공탁 특례제도 악용 대응 방안

-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주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박 찬 영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I. 들어가는 말

’22. 12. 9. 「공탁법」 개정으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도입되면서 “재판 계속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변제공탁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접촉 없이도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형사피해 회복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탁을 하거나, 판결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함으로써 공탁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 자체가 배제된 상태로 피고인이 감형을 받는 등 제도 악용에 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제문의 내용은 지난 1년간의 형사공탁 특례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과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데, 본 토론회에서는 실무상 가장 시급히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기습공탁으로 인한 부당감형 방지 방안”을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¹⁾

1) 언론에 보도된 ‘경남 산청군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1억 5,000만원을 공탁하여 감형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한 소위 먹튀공탁 사건’은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이전의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이 아닌 민사변제공탁을 접수하였음에도 재판부가 별다른 확인 조치 없이 양형사유로 참작한 이례적인 사안인 점 등 고려

II.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형사공탁사실 통지 문제

1. 문제점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아닌 일반적인 공탁절차에서 공탁물이 접수되었을 때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²⁾.

다만, 형사공탁 특례제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탁이 접수되므로 공탁관이 일반적인 공탁제도와 같이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탁법」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³⁾, 실제 실무상으로도 공탁관의 형사공탁 통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탁사실을 공고하는 방식은 피해자가 형사공탁을 예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통지가 제대로 도달하기 어렵고, 기습공탁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판결 선고 전까지 인터넷 공고를 확인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하여 실질적인 통지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입법적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 또는 선정된 경우에만 공탁사실을 통지하고 있어 변호사가 선임 또는 선정되지 않은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수 없고⁴⁾, 검찰은 위와 같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검예규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피해자 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탁소에서 검찰까지 형사공탁사실이 통지(우편 송달 방식)된 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피해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거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상태인 경우 인적사항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인해 검찰이 모든 형사공탁 사건의 통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공탁규칙 제27조(공탁물 납입절차)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29조(공탁통지서의 발송) ① 공탁관은 제27조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제23조의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3)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4) 공탁법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 ②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 또는 선정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은 제1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그 변호사에게 고지한다.

2. 개선방안

공탁제도의 일반적인 절차를 고려할 때, 공탁관이 피해자에 대한 공탁사실 통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전체 공탁사건의 피해자 통지 여부를 일괄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 하에서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방식으로 통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이나,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검토 중인 「공탁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탁소에서 법원과 검찰에 공탁사실을 통지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과 검찰은 직권으로 피공탁자 동일인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므로, 공탁소에서 신속히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개정 「공탁규칙」이 시행되면 일반적인 공탁제도 절차와 같이 공탁소에서 피해자에게 통지 업무를 수행 및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공탁제도의 본질에 부합하고, 원활하고 신속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공탁소, 법원, 검찰 간 지속적인 실무 협의가 필요합니다.

Ⅲ. 기습공탁으로 인한 부당감형 방지 방안

1. 문제점

형사사건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 직전’ 형사공탁을 접수한 경우, 법원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공탁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 내지 공탁금 불수령 의사 제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실제 형사공탁 실무에서 ‘기습공탁 감형’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 악용에 관한 주요 언론보도 내용]

- '23. 6. 12. 자 한겨레, 「피해자 합의 뜻 없는데 ‘공탁’하고 감형 받는 성범죄자들」
- '23. 8. 13. 자 연합뉴스, 「합의 안 되면 공탁, 형사공탁제도 악용」
- '23. 9. 3. 자 아주경제, 「피해자 엄벌 원해도 돈 내면 감형, 형사공탁제도 개선 시급」
- '23. 9. 4. 자 아주경제, 「제2n번방 공범도 형사공탁 감형, 선고 전 피해자 의사 확인해야」
- '23. 8. 29. 자 법률저널, 「피해자 2차 가해하는 법원의 일방적 형사공탁 감형」
- '23. 10. 5. 중앙일보, 「연예인 출신 사장, 또 성추행 감형, ‘꼼수감형’ 루트된 형사공탁」
- '23. 11. 17. KBS, 「전직 조폭 두목의 살인... 3억 5천만원 맡기고 4년 감형」

- '23. 7. 25. MBC PD수첩 방송「감형의 기술, 천사 공탁」
 -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나, 오히려 형사 피고인들이 부담 감형을 받는 제도로 악용되는 사례 속출
 -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통해 감형을 받는 과정에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에 부당함을 느끼고, 판결 선고 직전 공탁을 하는 소위 '기습공탁' 사례가 속출하여 불안감 호소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접수하더라도 '공탁 경위, 금액, 피해 법익,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양형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으나, 변론을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탁 경위나 공탁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양형판단 요소에 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2. 개선방안

기습공탁이 접수되는 경우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대검찰청은각급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접수 시 ① 피해자 의사를 신속히 확인하여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하거나, ② ‘공탁 경위, 금액, 피해 법익,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양형 판단을 해달라는 양형의견을 개진하고, ③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에도 공탁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된 사례에서는 적극 항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기습공탁이 접수되는 경우 공탁소에서 검찰에 공탁사실을 우편 통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인해 검찰에서도 공탁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검찰에서 선고연기 내지 변론재개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 추가적인 양형심리를 할 것인지 여부는 소송지휘권에 관한 사항이라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기습공탁이 접수된 사안에 대한 각 재판부의 소송 진행 방식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술권 보장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공탁이 접수된 모든 사건 피해자들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사공탁이 접수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확인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재판 예규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IV. 결론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의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기습공탁이 접수되는 경우 공탁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부당한 감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발제문의 내용은 그 대응책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은 그 절차상 신속한 문제해결이 어렵고 개정안 내용에 따라서는 일부 관계 기관들의 반대도 예상되어 개정안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도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대법원 또는 대검찰청 예규나 재판 예규 등의 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앞서 설명한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토론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1주년

- 무엇이 문제인가 -

류 경 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2022. 12. 9. 형사공탁특례 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에 따른 양형의 실태와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형의 통일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귀한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하나마 의견을 보탬 수 있는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종래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는 민사상 공탁을 일컫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¹⁾ 당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²⁾ 이에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를 신설하여,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에도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³⁾

1) 전문위원 진선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382회 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20. 9) 참조.

2) 법제사법위원회,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2020. 11.) 참조.

3)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일방적 행위인바, 양형감경을 원하는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기재에 관한 특례를 형사공탁에 인정할 것인지, 또는 양형감경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사공탁에서도 일반 공탁과 동일한 인적사항 기재를 요구할 것인지는, 범죄예방 및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입법형성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다[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19헌마516, 586, 768, 2020헌마41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나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보장과 공탁을 양형에 반영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등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헌법 제27조 제5항), 법원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합니다(형법 제51조).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 그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은 모색하는 것은, 이러한 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충실한 양형심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견을 밝혀 주신 발표자께 감사드리며, 모쪼록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혜가 모여서 바람직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신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보장을 위한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개선이나 양형기준의 검토 등에 관한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발표문에 관한 토론이라는 특성상 부득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거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쟁점에 대하여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발표자께서 정리하신 목차에 따른 쟁점별로 간략하게나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2. 형사공탁을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 형벌의 기능 -

형벌은 주로 응보를 목적으로 하는 과거의 범죄에 대한 사후적 처분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사회보호의 제반 견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벌의 기능이 범죄인에 대한 응보와 특별예방 이외에 사회일반인에 대한 일반예방에 있다고 할 때,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심리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되고 형의 양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서 친고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거나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성폭력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상황에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 반영되는 방법도 형벌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총래 강간죄 등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취지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소권의 행사 여부 자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제한하려는 데 있었

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 취소를 얻어내기 위하여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었고, 성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⁴⁾ 이로써 성폭력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양형기준을 정립하고,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범죄유형에 따라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참작되고 있음에도, 양형심리과정이나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대한 조사나 절차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비롯되는 예도 있는 만큼, 다소 형식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조사하거나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던 구 형법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양형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시각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규모와 공탁액수의 부합 정도,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할 만한 공탁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정도는 물론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활이나 상태, 경제능력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전 과정을 조사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보장’이라는 관점과 함께, ‘양형의 조건’으로서 형사공탁을 양형기준이나 양형인자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형사공탁특례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가.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보장 (형사피해자 진술권)

형사공탁절차(별지2 참조)에서 피해자의 절차참여가 문제되는 단계는, 공탁관이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인터넷공고와 함께 법원 및 검찰에 공탁사실을 ‘통지’한 이후부터입니다.⁵⁾ 피해자는 법원과 검찰로부터 피고인의 공탁사실을 ‘고지’받아

4)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법률 제11574호) 제안이유 참조.

5) ‘형사공탁 절차와 공고내용’에 대하여는, 대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https://dkt.scourt.go.kr>), 법무부의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 대한변호사협회(<https://www.koreanbar.or.kr>), 대한법무사협회(<https://kjaar.kabl.kr>) 등 참조.

야만 비로소 ‘공탁회수동의’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공탁에서 피해자 절차참여의 핵심은 형사공탁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고지’ 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형사공탁이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지거나 법원과 검찰에서 형사공탁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해자의 절차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발표자께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이른바 기습공탁이나 먹튀공탁 그 자체를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 내지 긍정적 요소로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혀 주셨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회에서는 형사공탁을 접수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법안까지 발의하였으나,⁷⁾ 이는 피고인의 형사공탁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데다가 선고기일 지정 등 재판부의 기일지정이나 절차운영에 부담을 초래하고, 공탁시기 준수 여부 및 공탁의 효력이나 적법성에 관한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방법보다는, 형의 양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형사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전 과정을 살펴야 한다’는 측면에서,⁸⁾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보장’이라는 본질적인 관점에서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나. 양형기준(양형인자)의 반영 여부 (양형의 조건)

당초 양정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공탁특례(의안번호 제1741호)에 관한 제안정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공탁수령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고,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미한 형사사건에서 거액의 합의금 요구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⁹⁾들을

6) 관계법령에서 공탁권이 피고인의 공탁물 납입을 법원과 검찰 등에 알리는 절차는 ‘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에게 공탁사실을 알려주는 절차는 ‘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통지’와 ‘고지’를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4951) 참조.

8) 이를테면, 설령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선고기일 직전에 범행을 부인하던 중전의 의사를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감형을 위한 목적으로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피고인이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불필요한 증거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고, 이에 반해 피고인이 절차의 전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고인의 자산을 처분하여 공탁금을 마련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각각의 개별적인 사안에서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예를 들어 경미한 폭행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터무니 없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나,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¹⁰⁾ 형사공탁특례는 성폭력범죄와 같은 중범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경미한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폭력범죄와 같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공탁도 논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¹¹⁾

일반적으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양형인자 중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내지 ‘합의’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¹²⁾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에서는 위와 같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자와 관련된 감경요소로 고려하고,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일반양형인자 중 행위자와 관련된 가중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나 피해 회복과 관련된 양형인자는 감경요소나 가중요소 모두 ‘행위’ 자체가 아닌 ‘행위자’와 관련된 요소에만 포함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행위’에 관한 양형인자에 따른 권고영역(감경, 기본, 가중) 구간 자체를 결정하는 데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행위’ 요소에 따라 결정된 권고영역의 각 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데에만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하였습니다.¹³⁾ 결국 형사공탁을 위한 피해 회복은 성폭력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서는 양형에 참작하거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고,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도 기본적으로 이와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액의 합의금을 위해 고의로 형사사건을 유발하는 경우 등이 있음.

10) 전문위원 진선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382회 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20. 9) 참조.

11) 국회회의록 제21대 제382회 4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각 참조.

12) 양형위원회, 양형기준(2022) 참조.

13) 범죄유형별로는 예외적으로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행위요소에 반영되어 권고영역의 구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공탁을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는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수동적으로 응하는 경우나 합의에 준할 정도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 등 여러 사정이 있음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처벌불원’이라는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법적 처벌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인지, 양형기준에서 권고영역의 구간 자체를 감경으로 변경하되 그 구간 내에서는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인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로서 고려해 달라는 취지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경미사건이 아닌 중범죄에 관한 양형심리 과정에서는 합의나 형사공탁 등과 같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형사공탁특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① 형사공탁 절차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및 ② ‘양형의 조건’과 관련하여 형사공탁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는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피해자 절차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

1) 헌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제도적 구현이라는 인식

형사공탁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나 태도는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구현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관한 주요 사실을 통지받고, 공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공탁을 비롯한 피해 회복이 양형기준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형실무에서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는 만큼,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는 인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공탁사실 고지절차의 이행 및 공판진행(형사기록)에 대한 접근권 보장

법원과 검찰은 형사공탁절차에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공탁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공탁사실의 고지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피해자 변호사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하고,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데에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공탁규칙 제85조 제2항,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예규) 제9조]. 검찰 형사공탁 담당직원도 해당 형사사건의 피공탁자나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대검찰청예규) 제4조].

성폭력범죄와 같은 중범죄에서 피해자가 형사공탁절차에 참여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절차는 중요한 의미를 있습니다. 특히 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관한 정보가 노출됨에 따른 불안감이 있는 만큼, 피해자의 상태나 의사를 세심하게 살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재판절차 진행상황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기록이 전자기록화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공판조서(기일지정이나 석명사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 포함)’와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문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에서는 각각의 문건별로 ‘비공개’ 설정이 가능하므로, 피해자에게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안 되는 문건이 있는 경우 이를 비공개로 설정해 놓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제3자의 사생활보호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전자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코트넷 사건검색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절차진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에 피해자가 직접 형사공탁에 관한 의견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될 것입니다.

3) 공탁금 수령절차의 간소화 및 배상명령제도의 활용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자의 사생활보호에 충실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탁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의 공탁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 또는 검찰을 직접 방문하여 동일인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함은 물론이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원과 검찰을 방문하도록 하는 어려움과 또 다른 형태의 피해를 야기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최근 검찰과 실무협의를 거쳐 법원과 검찰이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을 통지받게 되면, 피공탁자인 피해자가 법원과 검찰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도록 공탁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법원과 검찰을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개인정보노출에 대한 위험부담을 덜게 되고, 법원과 검찰에서 공탁사실을 고지 받은 이후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고 간명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공탁금만으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¹⁴⁾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이 아닌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에 합당한 손해배상액 산정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도 있는 만큼, 실무상 배상명령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해 봅니다.

나. 형사공탁을 양형기준(양형인자)에 반영하는 방법

1)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양형기준의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경미한 형사사건에서의 활용을 그 대상

1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으로 한 것인 만큼, 성폭력범죄 등 중대범죄에서는 형사공탁에 따른 양형인자 고려 내지 양형사유 참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형사공탁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¹⁵⁾ 형사공탁을 양형에 참작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하여는 비교법적인 연구가 병행되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양형심리 모델의 정립

형사공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전 과정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양형조사 방법을 다양화하고, 양형조사 항목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합의나 처벌불원이라는 의사표시 자체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경위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형사공탁을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나 의사를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재판부 참여관이나 법원조사관, 보호관찰소에서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나 형사공탁에 대한 의사표시를 보고서에 기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전 과정을 조사한다면,¹⁶⁾ 보다 충실한 양형조사와 양형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5. 마치며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개선하여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피고인 중심의 사고방식과 형사사법절차를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종래의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갖는 의미나 중요성이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현재의 성폭력범죄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나아가 형사공탁을 양형기준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하여도 형벌의 기능이나 새로운 양형심리 모델의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15) 이수진, “미국의 성범죄 재판”, 재판자료:형사법 실무연구 제123집, 법원도서관(2012); 이진화, “합의와 공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미치는 영향”, 사법 31호(2014) 참조.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후 1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탁규칙 개정 등의 움직임과 이른바 기습공탁 내지 먹튀공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형사재판의 양형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서 말씀드린 여러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노 선 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으로 2023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형사공탁된 사례를 조사하였다. 본 사례 조사는 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활동가 및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인들이 경험한 형사공탁 사례들을 수집한 조사로, 수집된 사례는 총 66건 이었다. 활동가 및 변호인들이 본 사례 조사에 참여하면서, 지원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시행에 따른 어려움과 한계들을 나누어주었다. 이에 본 토론문은 위 사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주년,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문에 대한 의견을 더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¹⁾

• 공탁 사실 고지 및 확인 방법

2022년 12월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제도에 따라,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이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법원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감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피해자가 공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온라인 고지: 전자공탁 홈페이지(ekt.scourt.go.kr)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내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에 먼저 고시된 다음 공탁관이 각 법원에 통지하면 나의 사건 검색 페이지에서 공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피해자가 각종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가 직접 공탁 상황을 체크하지 않으면 확인 어려움.
- 문자 메시지/우편 고지: 공탁 수일 후, 각 법원은 피해자가 신고 시 기입한 전화번호 혹은 주소로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 발송(형사공탁 고지 동의 시). 이때에는 공탁 여부만 안내.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공동주최로 12월 1일 오후 2시에 진행된 토론회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목소리〉에서 발표되었으며, 토론회 자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www.sisters.or.kr)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열람할 수 있다.

• 공탁 시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상당히 저해하는” 기습공탁 문제

위의 경로 모두 가해자가 공탁을 한 이후 피해자가 알게 되기까지 수일이 걸린다. 공판이 진행 중일 때 공탁을 하고 피해자에게 바로 고지된다면, 피해자가 공탁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공탁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엄벌탄원이나 회수동의서 제출 등으로 공탁 감형을 막기 위한 의견을 제출할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습공탁(변론종결 후 선고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실행하는 공탁 방식)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된다. 앞서 언급한 사례조사에 따르면 <공탁 시점>과 관련하여 전체 66건 중 공판 진행 중에 공탁한 경우는 40건(60%)이었고, 기습공탁은 한 것은 19건(29%)이었다. 나머지 7건은 기타로 공탁 시점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기습공탁은 단순히 피해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빼앗는 문제를 넘어, 공탁과 관련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안 된 채로 법적 과정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는 행위다. 조사된 사례들 중에서는 가해자가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다가 변론종결 시 갑자기 자백을 한 후 기습공탁을 한 사례부터, 가해자의 요청으로 합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차피 합의 안 해도 공탁하면 감형”이라며 압박을 한 사례, 또 합의 논의도 갑작스럽게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는 합의금액의 절반가량만 공탁한 사례, 심지어 선고 하루 전에 공탁한 사례도 있었는데 여기서 열거한 사례들 모두 공탁이 감경사유로 판결문에 명시되어 감형되었다. 손쓸 틈도 없이 선고내용을 듣는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상당금액의 공탁”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해자를 위한 기계적 해석에 불과하다. 특히 형사공탁 중에서도 야비한 꼼수인 기습공탁은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는 처벌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데 실질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해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던 피해자에게 “상당금액의 공탁”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상당히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절차상 피해자의 소외: 공탁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한계

피해자가 가명을 사용했거나, 신고 접수 시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공탁 고지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은 고지되지 않고, 선임된 피해자 변

호사가 있다면 해당 변호사에게 고지된다. 국선변호사 선임 시 재판관련 고지 내용이 뒤늦게 전달되거나 아예 누락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²⁾

법원 혹은 법원공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했더라도, 피해자가 통신기기와 친숙하지 않은 장애인이거나 고령인 경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 홈페이지 상에 공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하더라도 온라인 인프라 활용 역량이 낮은 피해자는 선고 시 혹은 판결문을 통해서 공탁 감형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 인프라 활용은 활용역량 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심리적 상태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 꽤 높은 수준으로 집중해있지 않으면 피해자가 스스로 홈페이지 등에서 공탁 정보를 얻는 것은 아주 어렵다.

공탁 사실 중 피해자에게 직접 고지되는 내용은 공탁 여부뿐이다. 때문에 공탁 금액 등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하는 방법과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금액 등의 확인이 가능한 반면, 가명을 사용했거나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등의 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온라인 사이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찾아가야만 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거나 법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는 공탁여부를 알더라도 금액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 공탁 확인 후 피해자 대응 유형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일정 금액을 공탁한 다음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후 대응을 달리할 수 있다. 발제문 내용 중 2. 형사공탁을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에서 발제자가 정리 해주었듯이, 피해자들은 각기 상황에 따라 다른 태도와 대응을 보인다. 크게는 두 가지 경우 즉, 공탁금 수령의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있는 경우다. 그러나 공탁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들은 피해자마다 각기 다르다.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지만, 사실상 집행유예나 벌금 등 낮은 처벌이 예상될 때 경제적 처벌 및 손해배상의 의미로 공탁금 수령을 선택하는 피해자들이 있

2) 참고: [제도를 움직이는 토론회] 성폭력피해자X피해자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 2021.12.3,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주최.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sisters.or.kr/data/report/286>)

다. 또 합의의 의사가 있으나 가명 조서, 변호인 소통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공탁금 수령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신변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한 피해자의 경우 민사소송 시 본명 및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곤란하므로, 금전적 배상의 의미로 공탁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탁금을 수령할 때 피해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법원 공탁소에 제출하고, 본 사건의 피해자임을 확인받아야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한다는 부담은 여전히 남는다.

두 번째는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는 경우다. 앞서 언급한 형사공탁 사례 수집에서 전체 66건의 사례 중 43건(65%)의 사례에서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거나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별도로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형사공탁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회수동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중 20건의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명확한 공탁 수령 거부 및 엄벌탄원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가해자에게 유리한 인자로 채택하여 감형하였다. 이때 판결문에는 “공탁” 혹은 “피해회복” 등으로 감형인자가 명시되었다. 이 설문에서 수집된 사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수치를 일반화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이나, 피해지원 현장에서 형사공탁특례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적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들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피해자의 엄벌탄원에 반하는 공탁감형

발제 내용에서도 피해자들과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선변호인들의 경험과 의견으로 정리된 바와 같이, 지난 1년 간 형사공탁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피해자들을 힘들고 분노하게 만든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 감형 판결이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공탁으로 인한 감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공탁회수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했는데도,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자에게 유리한 인자로 판결문에 적시한 판결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진행한 사례조사에서도 다수 확인되었다.

문제는 발제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합의나 공탁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공탁을 해석하여 감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손꼽혔다. 이때 재판부는 가해자의 공탁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기여 혹은 노력”으로 해

석한다는 것을 판결문에 명시한다. 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회복은커녕 오히려 더 큰 분노와 상처를 유발하는 공탁을 “피해회복”으로 해석하는 사법부의 몰이해와 불합리함으로 이해되며, 이는 재판부 뿐 아니라 사법부 및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안으로 이어진다.

• 변화와 개선에 대한 현장의 노력과 목소리

형사 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동안, 피해자를 더욱 좌절케 하고, 분노스럽게 만들었던 공탁 감형 판결들이 많았지만, 피해자를 비롯하여 검찰, 재판부, 피해자변호사, 피해지원 단체들의 노력으로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공탁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양형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항소를 기각하거나, “공탁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나 합의금 수령 등을 거절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점을 결정적 양형인자로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한 판결문도 있었다.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근거로 하여, 유리한 양형인자로 채택하지 않은 이러한 판결들은 향후, 형사공탁특례제도 운영의 방향성을 짚어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납득할만한 판결들이 오롯이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공탁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해도 그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 판결들이 훨씬 많은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그를 통해 더욱 일관된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제언

발제자가 짚어주신 제도의 문제점에 상당부분 공감하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한다. 특히 기습공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론 종결 후 공탁 시 변론 재개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공탁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그 의사를 양형에 반영해야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깊이 공감한다. 아래에서는 발제자가 언급하지 않았거나 간략히 지나간 내용에 대해 보충적으로 제언하며 본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공탁 감경이 불가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 피해자가 엄벌탄원 및 공탁회수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가해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탁했을 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공탁금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해당 공탁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공탁 감경을 하지 않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2) 피해자 불상 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의 연락처나 주소지가 불명확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등) 공탁금을 수령하여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감경인자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3)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초범이 아닌 누적범죄로 보아 가중사유로 삼아야 하며, 복수의 피해자들이 엄벌탄원을 했을 때는 공탁감형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피해자에게 공탁 여부 고지 시 금액도 함께 고지하여 빠른 상황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의 공탁에 대해 피해자가 제대로 된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으려면, 공탁에 대한 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나 사건 검색을 통해 공탁 사실을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일주일 이내에 확인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공탁을 가해자에게 유리한 감경요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토론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1주년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임 효 진(법무법인 YK 변호사)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피해자국선 변호사님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형사공탁제도의 운영실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제도의 개선 방향을 말씀해주신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발제문에서 말씀해주신 의견 및 제안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경험한 형사공탁제도의 실무상 활용과 의견 등을 더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 형사공탁특례제도의 도입 배경

1. 형사공탁특례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이유

형사공탁 특례제도 도입 이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변제공탁이 원칙이어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 절차 및 공탁물출급 절차의 정 확성 담보 등을 위하여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도입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한 동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2. 형사공탁특례제도가 기존 형사변제공탁과 다른 점

기존 형사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¹⁾ 변제공탁(이하 ‘변제공탁’이라고만 합니다)으로서 ‘수령거절, 수령불능,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의 공탁원인이 있어야 하고,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특례(이하 ‘형사공탁’이라고만 합니다)는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명 대신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형사공탁의 경우 보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변제공탁과 명백하게 구별되고, 제도적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II. 형사공탁의 실무상 활용

1.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공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 금액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나 부득이 피해자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이를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음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존재함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금액을,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형사공탁이라고 하더라도 양형사유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2.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에 관하여

가. 발제문에서는 통상 형사공탁에서 제출되는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은 법령상 그 제출이 강제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임의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등이 변제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탁금회수제한신고의무규정을 마련하거나, 재판부에서 공탁을 양형사유로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는 내부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현재 실무에서는 우려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업무진행에 있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변제공탁 절차에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²⁾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공탁은 변제공탁의 특례로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탁자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이 있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총 9개의 금전공탁서 양식을 제정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로서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153호)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일반 변제공탁 양식과 형사사건용 공탁양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용 금전공탁서³⁾에서는 관련 형사사건번호와 사건명 및 공탁금에 대한 회수제한 신고란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공탁서 하단 회수제한신고란에는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방법으로 회수제한신고를 하는데, 이는 실무에서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민법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별지1] 금전공탁서(형사공탁) 참조

회수제한신고란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공탁관은 일반 변제공탁⁴⁾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회수제한신고를 하지 않은 형사공탁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실무례입니다.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한 피고인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데, 사실상 형사공탁은 회수제한신고를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일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할 때에는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부적 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정상자료로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의 유의사항(재형 2000-4)

제정 2000. 5. 16. [재판예규 제772호, 시행 2000. 5. 19.]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측이 합의금등을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예규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1988.12. 3. 행정예규 제118호)"에 따른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피공탁자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0. 5. 19.부터 시행한다.

형사사건에서 변제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실무 형사재판에서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함에 있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양형에는 공탁사실에 더하여 공탁금 회수 제한신고 여부 등이 참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별지2] 금전공탁서(변제 등) 참조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노2404 판결

...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회수제한신고를 하고 피해자 E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 C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대전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노401 판결

...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피공탁자의 동기가 없으면 이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 신고를 하였다.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라도 상당한 금액의 돈을 형사공탁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또 다른 피해자는 성명불상자로서 그 신상을 알 수 없어 형사공탁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약속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가족들 사이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견고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노1409 판결

...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다만, 피고인은 2018. 10. 17. 및 2018. 12. 4. 각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 및 5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나, 위 각 공탁 모두 회수제한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각 공탁금이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부산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3059 판결

... 피고인과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9. 2. 12.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공탁을 주도한 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위 회사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회수제한 신고가 수반되지 않은 민법상의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탁의 구속력이 불확실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까지 감안하여 정상자료로 참작하기로 한다.

3. 형사공탁과 양형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이를 양형에 참고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상당 금액 공탁’은 결정된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일반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에 해당하고, 모욕죄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하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을 정하는 데 사용되는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에 해당하며, 성범죄 및 모욕죄에서 ‘상당 금액 공탁’은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도 기능합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만약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발제문에서 여러 사례를 언급하여 주신 것처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탁을 한 경우, 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3. 1. 12.자 2022노2633 판결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2022. 12. 9. 시행된 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해당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노1201 판결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직전인 2022. 12. 16.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투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점, 피해자는 위 형사공탁에 대하여 그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고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할 뿐이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2022. 12. 20.자 엄별단원서 및 공탁금 회수동의서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 공탁금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형사공탁 사실이 원심의 양형을 감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춘천지방법원 2023. 9. 1. 선고 2023노565 판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법원에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형사공탁된 금원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Ⅲ. 기습공탁에 관한 제도개선의 안

1. 발제문에서 기습공탁을 변론종결 전후 판결 선고로 앞두고 피해자가 공탁 사실조차 알지 못해 재판부에 피고인의 공탁에 대한 어떠한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형사공탁사실을 신속히 피해자에게 알리고 변론종결 후 공탁이 된 경우, 필수적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 기습공탁과 피고인의 사정으로 공탁이 늦어지는 경우를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구별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나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경우, 가족이나 주변에 알리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합의금이나 공탁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어떤 피고인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을 하거나, 어떤 피고인은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사용처를 숨기고 금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선고기일을 3일 앞두고 간신히 공탁을 한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쇠골 등이 골절되어 6개월가량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부모님께 이리저리한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가까스로 형사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일로부터 3일 전인 2023. 11. 13.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선고 시까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공탁 사실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인데, ‘기습공탁’으로 보인다는 프레임 속에 피고인의 노력이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재판 진행 중 사전에 형사공탁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라는 교감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이후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등의 운용의 묘를 발휘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3. 발제문에서 형사공탁에 관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판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형사공탁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이 공탁을 할 경우, 필수적으로 변론재개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공탁관이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변경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사항

마지막으로 발제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 없이 소를 청구해야 하고, 소장이나 판결문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발제문에서 지적하신 형사공탁의 문제점들과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별지 1]

[제1-9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공탁번호		년금제호		년월일신청		법령조항	민법487조
공 탁 자	성명 (상호, 명칭)			피 공 탁 자	성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 주사무소)				주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탁금액		한글	보관은행		은행지점		
		숫자					
형사사건	사건번호	경찰서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년제 지청 지원	호 년 년	형제 고단(합)	호 제 호
	사건명						
공탁원인사실							
비고(첨부서류등)		<input type="checkbox"/> 계좌납입신청 <input type="checkbox"/> 공탁통지 우편료 원					
반대급부 내용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회수제한 신고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공탁자 성명 인(서명) 대리인 성명 인(서명) ※ 회수신고란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금전 공탁서(변제 등)”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공탁서 원본을 형사사건이 최종 계류 중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4.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5.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2]

[제1-1호 양식]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 탁 번 호		년 급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피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공탁원인사실							
비고(첨부서류 등)		<input type="checkbox"/> 계좌납입신청 <input type="checkbox"/> 공탁통지 우편료 원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5.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6. 공탁서는 제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

부



공탁법

[시행 2022. 12. 9.] [법률 제17567호, 2020. 12. 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장 공탁 절차 <개정 2008. 3. 21.>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 국내에 주소나居所(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

②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6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8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9조(공탁물의 수령 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9. 12. 29.>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전문개정 2008. 3. 21.]

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1조(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장 이의신청 등 <개정 2008. 3. 21.>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13조(공탁관의 조치) ①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① 공탁금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5. 12. 15.>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확정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 ④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 4. 5., 2014. 12. 30.>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 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5. 공탁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3명
-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이 임기 중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事務機構)를 둘 수 있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7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
5. 재산 및 회계
6. 사무기구의 설치
7. 위원의 임명·위촉과 해임·해촉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② 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8조(등기사항) 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0조 삭제 <2015. 12. 15.>

제21조 삭제 <2015. 12. 15.>

제22조 삭제 <2015. 12. 15.>

제23조 삭제 <2015. 12. 15.>

제24조(공무원의 겸직)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감독)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5조의2 삭제 <2015. 12. 15.>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7조 삭제 <2015. 12. 15.>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설 2015. 12. 15.>

제28조(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2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30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

③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4.>

[본조신설 2015. 12. 15.]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번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본조신설 2015. 12. 15.]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21.>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
- ③ 심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3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36조(기금의 일시차입)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37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31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38조(보고 및 감독) ①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기금사용계획과 기금사용결과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39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41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부칙 <제18669호, 2022. 1.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탁규칙

[시행 2022. 12. 9.] [대법원규칙 제3073호, 2022. 10. 27.,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登記심의관실) 02-3480-18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 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시·군법원 공탁관(供託官)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변제공탁(辨濟供託)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민법」 제487조, 제488조에 따른 변제공탁

2. 재판상 보증공탁(保證供託)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나.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공탁

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에 따른 재심(再審)이나 상소(上訴)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執行停止)와 관련된 공탁

라.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제1항에 따른 상소제기나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마. 「민사집행법」 제34조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바.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4조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暫定處分)과 관련된 공탁

사.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5조에 따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아.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명령과 관련된 공탁

자. 「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차.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제307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공탁

3. 집행공탁(執行供託)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 해방금액(解放金額)의 공탁

4. 몰취공탁(沒取供託)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에 따른 소명(疏明)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

제3조(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①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帳簿)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장(元帳)

2.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출납부

3.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사건부

4. 불수리사건 관리부

5. 문서건명부

②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제4조(원장) ① 공탁관은 원장(각 공탁사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전산 등록한 기본장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受理)하거나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인가(認可)한 때에는 이를 원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출납부) ① 출납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가 보내온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결과에 관한 내용을 일자순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결과에 관한 내용은 원장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부) ① 사건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② 사건부에는 공탁신청사건의 접수사실을 등록하고, 공탁물의 지급 등으로 공탁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완결일

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사건부에 등록할 공탁번호는 연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부호문자는 금전공탁은 “금”으로, 유가증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전자등록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탁은 “증”으로, 물품공탁은 “물”로 하고, 진행번호는 접수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개정 2019. 9. 17.>

제7조(불수리사건 관리부) 공탁관은 불수리사건 관리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제48조의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결정연월일과 고지연월일
2.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일 및 결과

제8조(문서건명부) ① 문서건명부에는 공탁신청과 불수리 결정의 고지 이외의 공탁관련 모든 문서의 접수 및 발송사실을 등록 한다.

② 문서건명부의 진행번호는 접수문서와 발송문서를 구분하지 않고 등록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제9조(일계표) 공탁관은 납입 및 지급된 공탁사건에 관하여 매일 일계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출력하여 법원장(지방법원 지원에서는 지원장, 시·군법원에서는 시·군법원 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공탁기록 및 서류철) ① 공탁사건을 접수한 공탁관은 사건마다 공탁기록을 만들고, 공탁에 관한 서류를 접수순서에 따라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서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편철한다.

1. 일계표철
2. 월계대사표철
3. 우편발송부
4. 기타 문서철

제11조(날인에 갈음하는 서명 등) 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출하는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재문자의 정정 등) ① 공탁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그 밖에 공탁에 관한 서면에 적는 문자는 자획(字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공탁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지급위탁서·증명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訂正), 추가나 삭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할 때에는 한 줄을 긋고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하고,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하거나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정 등을 한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인 때에는 공탁관은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인감(제55조제2항의 인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도장을 찍어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계속 기재) 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 양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 장에 다 전부 적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로서 적당한 양식으로 계속 적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속 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의 간인) 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작성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 서류의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인 때에는 공탁관이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① 공탁서, 공탁서 정정신청서,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등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을 반환한 뜻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6조(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다음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1.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2. 제21조제3항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3. 인감증명서

제17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① 공탁관은 공탁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계서류를 합철하였을 경우에는 그 서류 중 보존기간이 가장 긴 서류에 따라 보존한다.

1. 제3조제1항 각호의 장부
사건별 완결연도의 다음해부터 10년
 2. 공탁기록
완결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
 3. 일계표철, 월계대사표철, 우편발송부, 기타 문서철
각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2년
- ②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보존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장부 등의 폐기절차) 공탁관이 보존기간이 끝난 장부나 서류를 폐기하려면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 공탁에 관한 서류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天災地變) 등 긴급한 상황에서 서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무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제2장 공탁 절차

제20조(공탁서) 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3. 공탁원인사실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8.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9.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10. 공탁법원의 표시
11. 공탁신청 연월일

제21조(첨부서면) ①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첨부서면의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② 제1항의 경우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2012. 10. 30.>

③ 공탁관은 제1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2. 1.>

제24조(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공탁신청서류 조사)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수리절차) ①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
 2. 공탁번호
 3. 공탁물 납입기일
 4.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
- ② 공탁관이 제1항에 따라 공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주요사항을 전산등록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전송하는 대신 공탁자에게 공탁물품납입서 1통을 주어야 한다.
- ③ 공탁자가 제1항제3호의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원장에 그 뜻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공탁물 납입절차)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28조(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①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전송을 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 ④ 삭제 <2012. 10. 30.>

제29조(공탁통지서의 발송) ① 공탁관은 제27조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제23조의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공탁번호, 발송연월일과 공탁관의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 ③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 ④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제30조(공탁서 정정) ①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訂正)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59조제2항은 공탁서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 ④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공탁관은 원장의 내용을 정정등록하여야 한다.
- ⑤ 수리의 뜻이 적힌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본다.
- ⑥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1조(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①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관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등록하되 1개의 기록을 만든다.
- ③ 공탁관이 제1항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에 그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유가증권·이표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④ 제2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2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⑤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제1항의 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⑥ 대공탁과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⑦ 대공탁과 부속공탁은 금전공탁사건으로 접수하고, 대공탁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유가증권공탁사건부와 원장에 유가증권의 출급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제32조(공탁물 출급 회수청구서) ① 공탁물을 출급·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번호
2. 출급·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기호·번호,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3. 출급·회수청구사유
4.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5.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6.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7. 제41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급·회수청구의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
8. 공탁법원의 표시
9. 출급·회수청구 연월일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다. 강제집행이나 채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라.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는 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류

제34조(공탁물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탁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다. 강제집행이나 채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2.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공탁물 출급 회수의 일괄청구)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 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제36조(각종 부기문의 기재) ① 공탁서와 청구서 등에 적을 부기문은 그 서면의 여백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용지에 적을 때는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 중 1통을 제출자나 공탁물보관자에게 내주는 때에는 두 서면에 직인으로 계인(契印)을 찍어야 한다.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 「인감증명법」 제12조와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4.>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 (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로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④ 공탁관이 제3항에 따라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한 때에는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① 제2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2조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에 준용한다.

②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③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제39조(출급 회수의 절차) ①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전산등록을 한 다음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내주고, 공탁물보관자에게는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공탁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예금계좌 입금신청 등) ①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이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공탁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공탁관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한 후 공탁금 출급·회수 인가와 신청계좌로의 입금지시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공탁관으로부터 계좌입금지시를 받은 공탁물보관자는 그 처리결과를 공탁관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2. 10. 30.>

제41조(공탁통지서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2011. 9. 28.>

② 제1항의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③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일부 지급) ① 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에 지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급·회수청구서의 여백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반환한 뜻을 적고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배당 등에 따른 지급) ①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2조에 따라 출급·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양도통지서 등) ① 공탁관은 제49조제1항의 서면, 제49조제2항의 판결등본 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轉付) 또는 추심(推尋)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그 밖에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그 서면에 접수연월일, 시, 분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을 받은 경우 공탁관은 그 내용을 해당 기록표지에 적은 다음 원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공탁물보관자의 처리) 공탁물보관자는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그 이자 나 이표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에 수령인을 받는다.

제46조(위와 같다) 공탁물보관자는 제45조의 공탁물을 지급한 후에 지급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한다.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 지급결과통지서에 지급한 내용을 적어 공탁관에게 보낸다.

제47조(공탁물품의 매각 폐기 등) ① 「공탁법」 제11조에 따라 보관중인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공탁물품의 매각은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다만, 공탁물보관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換價)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허가나 변경재판을 하기 전에 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다. 그 밖에 재판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허가나 변경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⑥ 공탁물보관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탁물품을 폐기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불수리 결정) ① 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수리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제49조(공탁수락서 등의 제출) ① 공탁소에 대한 민법 제489조제1항의 승인이나 통고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공탁물보관자 장부와 대조) ① 공탁관은 출납부를 공탁물보관자 장부와 대조하기 위하여 전월분 월계대사표를 매달 초에 공탁물보관자에게 보내고, 공탁물보관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공탁관에게 보내야 한다. 그러나 물품공탁의 경우에는 전년분에 관하여 매년 초에 이를 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이 제1항의 확인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와 대조를 하여야 한다.

③ 공탁관은 제2항의 대조 결과를 매달 초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이자

제51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공탁금의 이자지급)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위와 같다) ①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구에는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5조, 제46조를 준용한다.

제54조(이표의 청구) ①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제53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55조(대리공탁관 지정 등) ①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은 공탁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공탁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공탁관이나 대리공탁관을 지정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성명과 인감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6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공탁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7조(현금 등의 취급 금지) ① 공탁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금과 공탁유가증권에 관한 계좌를 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탁금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② 대리공탁관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제58조(사유신고) ①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집행법원에 보내고 다른 1통은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공탁관은 원장에 사유신고한 뜻과 연월일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9조(열람 및 증명청구) ①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하는 사람은 열람신청서나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수에 1통을 더한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2. 10. 30.>

⑥ 공탁관은 제1항의 열람신청이나 사실증명청구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제60조(공탁금의 소멸시효 조사) 공탁관은 공탁원금 및 이자의 출급·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 그 밖의 관공서에 공탁원인의 소멸여부와 그 시기 등을 조회(照會)할 수 있다.

제60조의2(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① 법원행정처장은 「공탁법」 제9조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우편 등으로 공탁금 출급·회수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전기통신사업자 등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6. 30.>

1. 공탁금 출급·회수권자의 성명(상호, 명칭)
2. 공탁금 출급·회수권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 공탁금 출급·회수권자의 주소(본점, 주사무소)
4. 공탁금 출급·회수권자의 전화번호

④ 제1항에 따른 안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2. 6. 30.>

⑤ 제3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번호,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안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2. 6. 30.>

[본조신설 2019. 6. 4.]

제61조(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된다.

제62조(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① 공탁관은 출급·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이나 이자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한 다음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이를 해당 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한다)에게 보낸다.

② 출납공무원이 제1항의 조서를 받은 때에는 1월 31일까지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공탁관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이나 이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출납공무원에게 보내고, 출납공무원은 지체 없이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63조(납부고지와 납부) ① 수입징수관은 제62조에 따른 조서를 받은 때에는 조사한 후 총액에 대한 납부고지서 2통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보낸다.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통을 첨부하여 해당 공탁관에게 하나의 청구서로 한꺼번에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공탁관이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35조와 제39조에 따라 인가한다.

④ 출납공무원이 제3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해당 수입징수관 앞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공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수입징수

관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본다.

제64조의2(대법원예규에의 위임) 공탁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0. 30.]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1. 외국인
 -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2.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제66조(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제67조(공탁통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 「국제우편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달통지가 가능한 외국에 공탁통지를 할 경우는 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③ 공탁관은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과 배달통지서의 반송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7장 전자신청 <신설 2012. 10. 30.>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26., 2021. 5. 27.>

1. “전자문서”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말한다)를 말한다.
4. “전자공탁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에 따른 공탁·출급·회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5. “전자공탁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공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0. 30.]

제6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 10. 30.]

제70조(사용자등록)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변호사회원
4. 법무사회원
- ② 제1항의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 외국인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 ③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법원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4.>
- ④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0. 30.]

제71조(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철회) 제7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의 변경 또는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신청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이후에만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0. 30.]

제72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3.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업무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자공탁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등록사용자가 전자공탁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12. 10. 30.]

제73조(전자문서의 작성 제출) ① 등록사용자의 전자문서 제출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등록사용자가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 ③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이 공동으로 공탁·출급·회수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로 전원이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로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서명은 공탁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 ⑤ 제1항의 경우 제22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의 경우 제20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0. 30.]

제74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7.>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 ③ 전자문서는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 10. 30.]

제75조(전자신청의 접수시기)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로 본다.

[본조신설 2012. 10. 30.]

제76조(정정신청 등)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0. 30.]

제77조(전자신청사건의 수리 등) ①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관이 수리, 인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에 수리, 인가 등의 뜻을 기재하고,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신청인에게 제1항의 처분결과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0. 30.]

제78조(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송을 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전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를 출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0. 30.]

제7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의 특례) ①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금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계좌는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0. 30.]

제80조(공고) 이 장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사항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27.]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 <신설 2022. 10. 27.>

제8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공탁”이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제공탁을 말한다.
2.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3. 법 제5조의2제2항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5. “비실명 처리”란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0. 27.]

제82조(공탁서 기재의 특칙) 제20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을 포함한다)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 10. 27.]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 공탁서에는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2.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분이나 조서·진술서·판결서 사본
3.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본조신설 2022. 10. 27.]

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 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
2.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0. 27.]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 ① 공탁관은 제27조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 또는 선정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은 제1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그 변호사에게 고지한다.

[본조신설 2022. 10. 27.]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제출 등) ①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은 지체 없이 공탁소에 그 발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27.]

제87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27.]

제88조(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은 군검찰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0. 27.]

제89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형사공탁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장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27.]

부칙 <제3073호, 2022. 10. 27.>

이 규칙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2.12.02 행정예규 제1321호

규칙 제83조제3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말한다.

1.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공소장, 재판장에 의하여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 등)
2. 그 밖의 규칙 제83조제3호에 해당함을 공탁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제7조 (피공탁자 성명의 비실명 처리)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방식으로 피공탁자의 성명을 비실명 처리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피공탁자의 성명을 비실명 처리한다.

1.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성만 입력하고 이름은 입력하지 아니한다.
2.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 중 일부가 기호처리 방식(○, □, △, ◇ 등으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된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 입력한다.
3. 공탁서에 피공탁자 성명 대신 가명이 기재된 경우에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하여 입력한다.

제3장 형사공탁 공고 등

제8조 (형사공탁 공고)

① 공탁관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탁소 및 공탁번호
 2. 공탁신청 연월일
 3. 공탁물
 4.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다만, 피공탁자의 성명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지 않거나 가명이 아닌 경우에는 성(성)을 제외한 이름은 비실명 처리한다.
 5.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의 성(성)이 별표 3 기재 이외의 성(성)일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공탁자의 성명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규칙 제84조제2항 에 따른 공고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 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

제9조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

①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4호 양식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규칙 제85조제1항 의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1.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공탁물, 공탁 연월일
2.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3. 규칙 제83조제2호 서면의 명칭

② 규칙 제85조제1항 에 따른 통지의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제9조제1항 에 따라 정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 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

- ③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원본은 해당 형사사건의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 ④ 재판장은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였고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데에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 ⑤ 제4항의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⑥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급절차 등

제10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피공탁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 방문하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사실통지의 접수)

- ① 규칙 제86조제1항 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은 지체 없이 공탁관에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이하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라 한다)를 팩스로 전송한 후 위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송부받은 공탁관은 그 서면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수령일자 및 발급기관을 해당 기록표지에 기재한 다음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제12조 (피공탁자 개인정보 전산등록)

- ①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가 제출된 때 그 서면의 기재사항을 피공탁자 개인정보관리에 전산등록 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 ②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 외에 피공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때 제7조에 따라 입력된 피공탁자 성명을 불러오기 방식으로 전산등록 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은 전산등록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 ①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와 별표 4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기재사항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는 공탁관이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위·변조방지바코드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 ③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사건에 대한 출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출급청구서 상단 여백에 별표 5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청구서 등을 관할공탁소에 전송한다.

제5장 열람·복사절차

제14조 (비실명 처리의 범위)

규칙 제87조 에 따라 비실명 처리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하 "비실명처리대상정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주소 등 연락처(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3.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제15조 (열람·복사 제공의 방식)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제14조 기재 비실명처리대상정보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여 복사한 사본 또는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열람·복사의 청구에 제공한다.

제16조 (사실증명 제공의 방식)

공탁관은 공탁관계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에 대하여 사실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전산 또는 수작업으로 가리거나(‘○, * 등’처리) 기재하지 않고 제공한다.

제6장 법원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관련 접수 및 발급 절차

제17조 (증명서 발급담당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사무는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 이하 "형사본안사건"이라 한다) 담당재판부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발급담당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18조 (신청의 방식)

- ① 동일인 증명서 발급의 신청은 서면(이하 "동일인 신청서"라 한다)으로 한다.
- ②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가 발급 신청하는 경우로서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인 신청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그 밖에 승계사실 소명자료(이하 '신청서 등'이라 함)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
 2. 신청서 등에 기재된 서명에 관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③ 동일인 신청서에는 1건당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동일인 신청서의 접수)

- ① 동일인 신청서의 접수 사무는 각급 법원의 제증명 담당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 ② 동일인 신청서를 접수한 접수담당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수내역을 입력한다.
- ③ 접수담당자는 전항의 접수내역을 입력함에 있어서 형사본안사건이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확정되어 검찰로 기록이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만일 형사본안사건이 이에 해당하여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한다.

제20조 (신청인의 자격 심사 및 동일인 신청서의 인계)

- ① 신청을 받은 접수담당자는 피공탁자와의 관계 등 신청인의 자격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 ②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담당자에게 제시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 ③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에 관한 심사를 마친 후 동일인 신청서를 발급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제21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의 허부 등)

- ①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신청서 우측 상단 허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는다. 신청권자에 의한 신청이 아니거나 법원이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우측 상단 허부란의 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고 비고란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다.
- ②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신청서의 허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은 후 그 원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제22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및 통지)

- ① 발급담당자가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양식에 의한다.
- ② 재판장이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발급담당자는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한다.
- ③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한 발급담당자는 지체 없이 공탁관에게 별지 제11호 양식을 팩스로 전송한 후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뒤, 통지서 사본은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부 칙 (2022.12.02.제1321호)

이 예규는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 공탁서 원본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피공탁자란의 성명은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 사건에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성명란 :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홍길동” 이 기재된 경우 “홍길동” 을, “홍○동” 이 기재된 경우 “홍○동” 을, “홍길동(가명)” 이 기재된 경우에 “홍길동(가명)” 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공탁원인사실란 : ①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0시 00분 00초 00초 00초 00초, 00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별지 제2호 양식]

○ ○ 법 원
형사공탁 공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탁소 및 공탁번호
2. 공탁신청 연월일
3. 공탁물
4. 형사사건번호
5. 검찰사건번호
6. 피공탁자
7. 공탁물 수령 · 회수와 관련된 사항

가.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후 출급할 수 있습니다.

나.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 . . .

○○ 법원 공탁관 ○○○

[연락처 : ○○○-○○○○○(○○법원 공탁계)]

[별지 제4호 양식]

형사공탁사실통지서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공탁신청연월일		
	공탁물		
	관련사건	법원사건번호 및 사건명	
		검찰사건번호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피공탁자		
첨부서면의 명칭			

공탁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라 형사공탁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법원 공탁관 ○○○ (직인)

[연락처 : 〇〇〇-〇〇〇〇(〇〇법원 공탁계)]

[별지 제6호 양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 굵은 글씨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탁번호		년금제호		공탁금액		한글 숫자	
공탁자	성명 상호명칭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청구내역	청구금액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금액		합계금액	비고
	한글			은행		은행	※ 이자금액 및 합계금액 란은 보관은행에서 기재함
	숫자						
보관은행		은행		법원지점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 ※ 해당란에 <input type="checkbox"/> 하 시거나 기타란에 간단히 기재하 기 바랍니다		출급청구시			회수청구시		
		※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아래 ※ 참조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 아래 ※ 참조			<input type="checkbox"/> 피공탁자 동의에 의하여 회수 <input type="checkbox"/> 무죄판결 확정에 의하여 회수 <input type="checkbox"/> 착오공탁		
비고 첨부서류 등		<input type="checkbox"/>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신분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위임장 <input type="checkbox"/> 인감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채권압류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 <input type="checkbox"/> 채권압류전부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 <input type="checkbox"/> 채권양도 원인서면 <input type="checkbox"/> 법인등기사항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등 초본 <input type="checkbox"/>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무죄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 <input type="checkbox"/> 착오 증명서면 <input type="checkbox"/> 기타					
계좌입금		<input type="checkbox"/> 계좌입금신청 금융기관		계좌번호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첨부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인				대리인			
주소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인 서명				인 서명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통 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수령인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인			

※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작성안내(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계좌입금’ 란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성명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에 하고,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에 하고 출급하면, 공탁원인사실·공탁금액 등 공탁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7. 해당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음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공탁자의 회수청구에 대한 동意的의 취지를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및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호 양식] 재판양식 B4970

○ ○ 법 원
형사공탁사실 고지서

사 건 20

피 고 인 (-)

이 사건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85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사실: 별지와 같습니다.

20 . . .

재판장 ○ ○ ○ 인

※문의사항연락처 : 00법원

형사 0단독

법원사무관 0 0 0

직통전화 : (000) 000 - 0000

팩 스 : (000) 000 - 0000

e-mail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서				허가	불허가
신 청 인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본인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대리인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포괄승계인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변호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명자료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신분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형사본안사건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피해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공탁사건정보	공탁소 및 공탁번호	지방법원 금제			
	공탁물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법원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위 피해자가 위 공탁사건의 피공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지 500원 법원 내에 위치한 우체국·은행에서 구입	
영 수 일 시	20 . . . :		영 수 인		

1. 형사본안사건이란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2. 해당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한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며, 확정된 사건은 검찰에서 증명서를 발급함)

니다.)

3.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명처리되고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되어 검사가 관리하는 사건 및 ②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은 검찰에서 담당하므로 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공탁자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형사본안사건	<div>법원</div> <div>고합</div> <div>(사건명)</div>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지방법원	금제 형사공탁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div>법원</div> <div>고단</div> <div>(사건명)</div>	
		<div>(예시: 김OO)</div>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탁규칙 제86조 제2항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사실을 통지합니다.

20

법원

법원사무관 (인)

※문의사항연락처 : 00법원

형사 0단독

법원사무관 000

직통전화 : (0000) 0000 - 00000

팩 스 : () -

e-mail :

[별지 제3호 서식]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발급 신청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서				허가	불허가
신 정 인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본인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대리인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포괄승계인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변호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명자료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신분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사건번호		사건명	재판부	
형사본안사건					
	피해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공탁소 및 공탁번호		지방법원 금제		
	공탁물				
공탁사건정보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법원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위 피해자가 위 공탁사건의 피공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지 500원 검찰청 내에 위치한 우체국·은행에서 구입
영수일시	20 . . . : .		영수인		
비고 (불허가 사유)					

- 형사본안사건이란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검찰청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확정된 사건의 경우 제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공탁자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형사본안사건	법원		고합
	(사건명)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지방법원	금제 형사공탁
	공탁물	(예시: 금전)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법원	고단
		(사건명)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예시: 김○○)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문서확인번호			
<p>공탁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위 공탁사건의 피공탁자 동일인을 확인합니다.</p> <p>20 . . .</p> <p>0000 검찰청</p> <p>검사 인</p> <p>(삼단바코드)</p>			

[별지 제5호 서식]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형사본안사건	법원		고합
	(사건명)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지방법원	금제 형사공탁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법원	
		고합	
		(사건명)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예시: 김○○)	
문서확인번호			
<div>공탁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사실을 통지합니다.</div> <div>20 . . .</div> <div>0000 검찰청</div> <div>검사 인</div>			